

제12회
전국
기록인
대회

코로나 시대, 기록관리의 변화와 과제

2020년 11월 20일(금) - 11월 21일(토)
온라인(ZOOM)

주관 |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주최 |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기록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찬 | 아카이브웍스(주), 알권리연구소, 주식회사 삼흥과학, (주)디앤디기술,
(주)알엠소프트, (주)퍼스트정보, (주)푸른솔환경,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김익한	한국기록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조직위원회

송동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영삼	서울기록원
조이형	국가기록원

[기획위원회]

김은아	서울기록원
김하나	명지대학교
남경호	국가보훈처
박지영	한성대학교
이정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신영	국가기록원

[집행위원회]

김진선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효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보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병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안내

ZOOM 사용자 메뉴얼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모든 세션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

■ 참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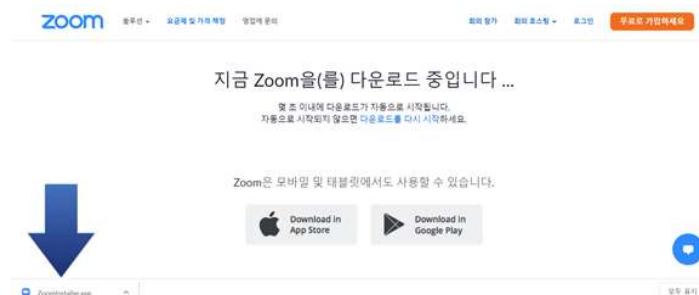
1. 본 자료집 5페이지의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ZOOM 링크 모음'의 링크를 클릭하여 회의장별로 입장하여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자료집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ZOOM 프로그램 혹은 어플을 통해 입장하고자 할 경우, 회의장별 회의ID와 PW를 입력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3.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는 회의장별로 링크가 생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회의장 링크가 존재합니다.
 - * 1일차 : 회의장 링크 1개 / 2일차 : 회의장 링크 5개
4. 듣고 싶은 세션이 있을 경우, 해당 시간대의 원하는 세션이 위치한 회의장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 * 예)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세션을 듣고 싶을 경우, 21일 **오후 4시~6시에 ★제2회의장★**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ZOOM 프로그램 미설치 시,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참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치방법은 본 자료집 2페이지 ~ 4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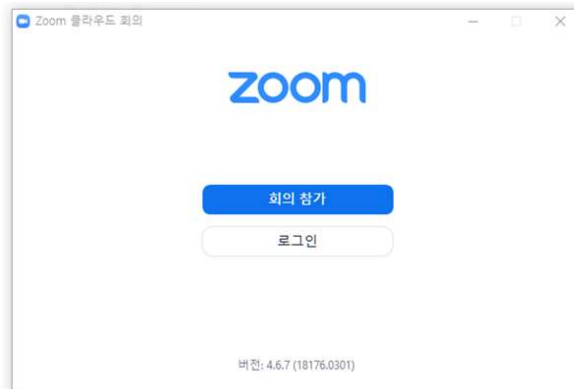
■ PC 이용 시

1. 링크를 통해 ZOO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 <https://zoom.us/support/downl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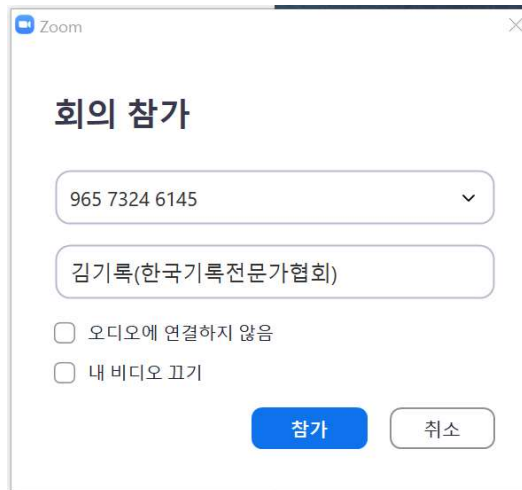


2. 설치한 ZOOM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회의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중 오디오 회의 옵션 선택창이 나오면 <컴퓨터 오디오 참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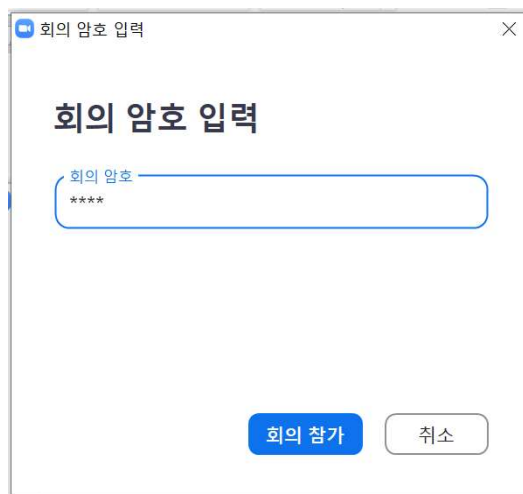
3. '회의 ID 또는 개인 링크 이름 입력'란에 참가링크 혹은 회의 ID를 입력하고 '이름'란에 이름(소속)을 입력한 후 입장합니다.

- * 입장 시 음소거 상태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미설정 시 잡음이 송출되어 대회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암호 입력 화면이 뜨면 '0000'을 입력 후 회의 참가버튼을 누릅니다.

-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모든 온라인 회의장 비밀번호는 0000으로 동일합니다.



■ 모바일 이용 시

1.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s'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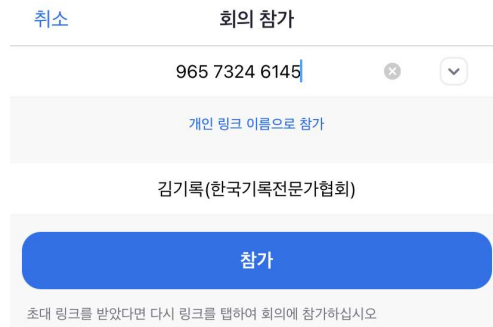
앱 평가하기
다른 사용자에게 의견을 들려주세요.



2. ZOOM 어플을 실행한 후, <참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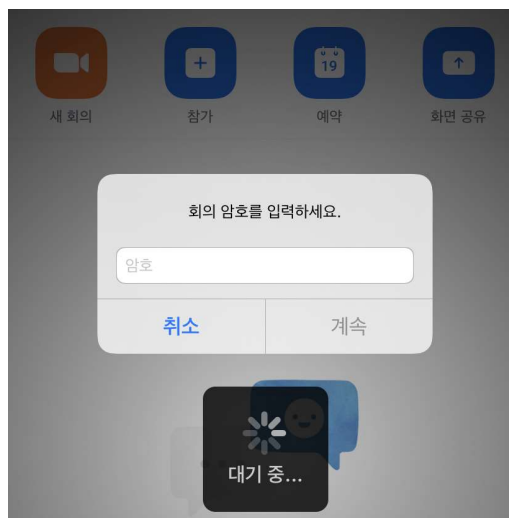


3. '회의 ID 또는 개인 링크 이름 입력'란에 참가링크 혹은 회의 ID를 입력하고 '이름'란에 이름(소속)을 입력한 후 입장합니다.



4. 암호 입력 화면이 뜨면 '0000'을 입력 후 회의 참가버튼을 누릅니다.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모든 온라인 회의장 비밀번호는 0000으로 동일합니다.



제 12회 전국기록인대회 안내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ZOOM 링크 모음

■ 1일차(11월 20일 금요일) 회의장 링크

- ID : 965 7324 6145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zoom.us/j/96573246145?pwd=WTd3RS9DS3ZkWWZUZ2p1NjZlbnk1UT09>

■ 2일차(11월 21일 토요일) 회의장 링크 모음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제1회의장
 - ID : 736 878 5101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7368785101?pwd=Q0hrVEhBMVdsUEMzejJOSTJzYmp4QT09>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제2회의장
 - ID : 583 821 7708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5838217708?pwd=SVhyOEImQWILZW10dE1mbE9kQUIVdz09>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제3회의장
 - ID : 767 807 2364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7678072364?pwd=NFUyRWFyMnoyakxCd3ZNYW9WN3FYZz09>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제4회의장
 - ID : 742 689 2333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us02web.zoom.us/j/7426892333?pwd=ZzljG8velVIUVFjOW0vUlpyQlA3dz09>
-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제5회의장
 - ID : 973 1978 1562 / PW : 0000
 - 접속 링크 : <https://zoom.us/j/97319781562?pwd=ZXFJRkptR0ZOVFdTSkd0TFB6SThtdz09>

제 12회 전국기록인대회 일정표

11월 20일 (금)

시 간	일 정
13:20 - 13:30	ZOOM 회의장 입장
	제1부 전체사회 : 박지영(한성대학교)
13:30 - 13:35	개회선언
13:35 - 13:45	[우수논문 시상]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부문
13:45 - 15:45	[라운드테이블 1] 새로운 일상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함께 배우다 토론사회 : 원종관(서울기록원) 토 론 : 김태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지영(서울역사박물관) 이경란(청주시기록관)
15:45 - 16:00	휴 식
	제2부
16:00 - 18:00	[라운드테이블 2]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기억기관의 도큐멘테이션 사례 토론사회 : 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토 론 : 김혜련(국립중앙도서관) 안대진(아카이브랩) 장지희(성북문화원)

11월 21일 (토)

시 간	일 정
09:50 - 10:00	ZOOM 회의장 입장
10:00 - 12:00	제 1 회의장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제 2 회의장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제 3 회의장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한다! /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제 4 회의장 [개별세션]
	제 5 회의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12:00 - 13:30	휴 식
13:30 - 15:30	제 1 회의장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제 2 회의장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제 3 회의장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화정보기술
	제 4 회의장 [개별세션]
	제 5 회의장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15:30 - 16:00	휴 식
16:00 - 18:00	제 1 회의장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제 2 회의장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 5 회의장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18:00 -	폐 회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세션별 프로그램 / 2020년 11월 21일(토)

시간	제1회의장(ZOOM 회의실)	제2회의장(ZOOM 회의실)	제3회의장(ZOOM 회의실)	제4회의장(ZOOM 회의실)	제5회의장(ZOOM 회의실)
09:50 - 10:00	회의실 입장				
10:00 - 12:00	1-1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2-1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3-1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씨와 아이들	4-1 [개별세션]	5-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사회 김하나(한국기록학회) 발표 1. 기록관리에서 기록혁신으로 (박건홍/한남대학교) 발표 2.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발표 3. 아카이브 체계의 재구축을 위하여 (김익환/명지대학교) 종합토론 이명남(한국기록학회), 손동유(한국기록학회)	사회 미정 발표 1. 국가기록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 개선방안 (설문원/부산대학교) 발표 2.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3. 국가기록회의의 관점에서 시민참여평가의 설계 (이경래/충양대학교) 종합토론 이승억(국가기록원), 문찬일(국가기록원)	사회 미정 발표 1.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윤기원/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발표 2. 공공기록물법에 묻는다.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할까요? (박수영/경상남도교육지원청) 발표 3.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이 가져올 변화 (우지현/경상남도교육지원청) 토론 정상명(경기도교육청), 채지아(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사회 서지인(부산지방보훈청) 발표 1. 국가보훈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검토 (남경호/국가보훈처) 발표 2. 지자체 기록관의 방향 : 너희는 무얼 하고 사니? (한정은/가칭)가칭)경기도기록관기록관리협의회) 개별토론 박두현(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철환(대통령기록관)	사회 왕호성(국가기록원) 발표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현황과 경과 (왕호성/국가기록원) 발표 2. 국가기록원 시범사업 현황과 관리방안 (이주환/국가기록원) 발표 3. 공공기관 적응사례 - 인사처 (신정열/인사처) 발표 4. 공공기관 적응사례 - 교육부 (유재상/교육부) 종합토론 사회 : 한능우(국가기록원), 토론 : 임진희(명지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12:00 - 13:30	휴식				
13:30 - 15:30	1-2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2-2 디지털 미래에 환경의 기록전문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3-2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화정보기술	4-2 [개별세션]	5-2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사회 최연희(정말기록당) 발표 1. 민간 아카이빙의 확산과 성장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표 2. 기록 활동 현장에서의 단상 (배은희/빨간집) 토론 민간 아카이빙 연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박숙희/영주 두검말기록단, 김영규(일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사회 김유승(중앙대학교) 발표 1. 디지털 미래에 환경의 기록전문적 직무역량 연구 (전보배/부산교육대학교) 발표 2. 디지털 미래에 환경의 기록전문적 양성 교육제도 연구 (윤은하/전북대학교, 박태연/전북대학교) 발표 3. 디지털 미래에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성주영/국가기록원)	사회 이동혁(한국문화정보기술) 발표 1.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기록 전시 사례 (오영단/한국문화정보기술) 발표 2. 발전 아카이브 구축 사례 (김화경/한국문화정보기술) 발표 3. 온택트(ontact)시대 문화콘텐츠기관 서비스의 흐름과 변화 (정해지/한국문화정보기술) 질의응답	사회 임광섭(우리소리박물관) 발표 1. 논문 문헌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오영단 / 사단법인 통일학의 집) 발표 2. 불특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발전방향 (이정남 / 토미도(주)) 질의응답	사회 미정 발표 1.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장지혜/전북대학교, 오효성/전북대학교) 발표 2. 문서유형 보존부터 다양화 연구 (양동민/전북대학교) 발표 3. 장기보존패키지(NEO3) 다양화 연구 (남동진/(주)팬소프트) 질의응답
15:30 - 16:00	휴식				
16:00 - 18:00	1-3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2-3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5-3 지능형 기록관의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사회 미정 발표 1. 사진술 근대적 기록 방식의 탄생 (박준석,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발표 2. 사진의 기록적 가치: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김태현,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발표 3. 5.18의 시각적 재현: 사진-영상기록을 중심으로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원) 종합토론 이기복(사진가 겸 포토 테크니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표 기록관리혁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발표: 황진현(한국외대) 토론: 김강현(국회기록보존소) 발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자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전 발표: 이준범(법원기록보존소) 토론: 이철환(대통령기록관) 발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3단계 프로세스 고찰) 발표: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토론: 문찬일(국가기록원)			사회 이철평(국가기록원) 발표 1.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현재와 미래 (한동유/국가기록원) 발표 2. 소장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OCR인식 성능 개선방안 연구 (홍장기/국가기록원) 발표 3.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계학습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 자동분류 적용) (박영미/국가기록원) 발표 4. 전자기록물 공개개봉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방안 연구 (김진아/국가기록원) 발표 5.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 (최광준/알뜰소프트) 종합토론 김재평(국가기록원), 임수중(ETRI)

I 목차

1일차 : 11월 20일(금)

주제 : 코로나 시대, 기록관리의 변화와 과제

(사회 : 박지영 / 한성대학교)

- 라운드테이블 1 13
 - / 주 제 : 새로운 일상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함께 배우다
 - / 토론사회 : 원종관(서울기록원)
 - / 토 론 : 김태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지영(서울역사박물관), 이경란(청주시기록관)
- 라운드테이블 2 14
 - / 주 제 :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기억기관의 도큐멘테이션 사례
 - / 토론사회 : 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 / 토 론 : 김혜련(국립중앙도서관), 안대진(아카이브랩), 장지희(성북문화원)

2일차 : 11월 21일(토)

제1회의장

■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사회 : 김하나 / 명지대학교)

- 기록관리에서 기록혁신으로 18
 - / 곽건홍(한남대학교)
-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20
 - /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22
 - / 김익한(명지대학교)

■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사회 : 최연희 / 정말기록당)

- 민간 아카이빙 확산과 성장 25
 - /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 기록 활동 현장에서의 단상 27
 - / 배은희(빨간집)

■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사회 : 미정)

- 사진술, 근대적 기록 방식의 탄생 30
/ 박준석(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 사진의 기록적 가치 :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32
/ 김태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5.18의 시작적 재현 : 사진·영상기록을 중심으로 34
/ 유경남(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제2회의장

■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사회 : 미정)

- 국가기록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 개선방안 38
/ 설문원(부산대학교)
-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40
/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국가기록화의 관점에서 시민참여평가의 설계 41
/ 이경래(중앙대학교)

■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사회 : 김유승 / 중앙대학교)

-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직무역량 연구 43
/ 전보배(부산교육대학교 기록연구사)
-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양성·교육제도 연구 44
/ 윤은하(전북대학교), 박태연(전북대학교)

■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회 : 박종연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기록관리혁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47
/ 발표 : 황진현(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 :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자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전 48
/ 발표 : 이준봉(법원기록보존소)
/ 토론 : 이철환(대통령기록관)
-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3단계 프로세스 고찰) 49
/ 발표 :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토론 : 문찬일(국가기록원)

제3회의장

■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사회 : 미정)

-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52
/ 윤기원(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 공공기록물법에 묻는다.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할까요? 54
/ 백수령(경상남도교육청)
-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이 가져올 변화 56
/ 우지원(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헌정보기술

(사회 : 이동혁 / 한국문헌정보기술)

-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기록 전시 사례 59
/ 오영단(한국문헌정보기술)
- 발언 아카이브 구축 사례 60
/ 김화경(한국문헌정보기술)
- 온택트(ontact)시대 문화콘텐츠기관 서비스의 흐름과 변화 61
/ 정혜지(한국문헌정보기술)

제4회의장

■ 개별세션

(사회 : 서지인 / 부산지방보훈청)

- 국가보훈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검토 65
/ 남경호(국가보훈처)
- 지자체 기록관의 방향 : 너희는 무얼 하고 사니? 67
/ 한정은((가칭) 경기도 시군기록관 기록관리협의회)

■ 개별세션

(사회 : 임광섭 / 우리소리박물관)

-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69
/ 오명진(사단법인 통일의 집)
-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발전방향 71
/ 이정남(토피도(주))

제5회의장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사회 : 왕호성 / 국가기록원)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현황과 경과 75
/ 왕호성(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시범사업 현황과 관리방안 77
/ 이주광(국가기록원)
- 공공기관 적용사례 - 인사처 79
/ 신정엽(인사혁신처)
- 공공기관 적용사례 - 교육부 81
/ 유재상(교육부(現 국가기록원 파견))

■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사회 : 한희정 / 한국국토정보공사)

-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84
/ 정지혜(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 문서유형 보존포맷 다양화 연구 86
/ 양동민(전북대학교)
- 장기보존패키지(NEO3) 다양화 연구 88
/ 남동선(㈜팬소프트)

■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사회 : 이점마 / 국가기록원)

-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현재와 미래 91
/ 한능우(국가기록원)
- 소장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OCR인식 성능 개선방안 연구 93
/ 홍정기(국가기록원)
-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계학습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 자동분류 적용) 95
/ 백영미(국가철도공단)
-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방안 연구 97
/ 김진아(국가기록원)
-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 99
/ 최광훈(알엠소프트)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1일차

11월 20일 (금)

시 간	일 정
13:20 - 13:30	ZOOM 회의장 입장
제1부 전체사회 : 박지영(한성대학교)	
13:30 - 13:35	개회선언
13:35 - 13:45	[우수논문 시상]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부문
13:45 - 15:45	[라운드테이블 1] 새로운 일상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함께 배우다 토론사회 : 원종관(서울기록원) 토 론 : 김태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지영(서울역사박물관) 이경란(청주시기록관)
15:45 - 16:00	휴 식
제2부	
16:00 - 18:00	[라운드테이블 2]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기억기관의 도큐멘테이션 사례 토론사회 : 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토 론 : 김혜련(국립중앙도서관) 안대진(아카이브랩) 장지희(성북문화원)

라운드테이블 1

**새로운 일상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함께 배우다**

토론사회 : 원종관(서울기록원)

토 론 : 김태현(한국외국어대학교)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오지영(서울역사박물관)

이경란(청주시기록관)

라운드테이블 2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기억기관의 도큐멘테이션 사례**

토론사회 : 윤지현(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토 론 : 김혜련(국립중앙도서관)

안대진(아카이브랩)

장지희(성북문화원)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2일차

11월 21일 (토)

시 간	일 정	
09:50 - 10:00	ZOOM 회의장 입장	
10:00 - 12:00	제 1 회 의 장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제 2 회 의 장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 기록평가연구
	제 3 회 의 장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씨와 아이들
	제 4 회 의 장	[개별세션]
	제 5 회 의 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12:00 - 13:30	휴 식	
13:30 - 15:30	제 1 회 의 장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제 2 회 의 장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제 3 회 의 장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헌정보기술
	제 4 회 의 장	[개별세션]
	제 5 회 의 장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15:30 - 16:00	휴 식	
16:00 - 18:00	제 1 회 의 장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제 2 회 의 장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 5 회 의 장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18:00 -	폐 회	

제 1 회 의 장

시 간	일 정	
10:00 - 12:00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사 회	김하나(명지대학교)
	발 표 1	기록관리에서 기록혁신으로 (곽건홍/한남대학교)
	발 표 2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발 표 3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김익한/명지대학교)
	총 합 토 론	이영남(한국기록학회), 손동유(한국기록학회)
13:30 - 15:30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사 회	최연희(정말기록당)
	발 표 1	민간 아카이빙의 확산과 성장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발 표 2	기록 활동 현장에서의 단상 (배은희/빨간집)
	토 론	민간 아카이빙 연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백숙희(청주 두껍말기록단), 김영규(철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6:00 - 18:00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사 회	미정
	발 표 1	사진술, 근대적 기록 방식의 탄생 (박준석,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발 표 2	사진의 기록적 가치: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김태현,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발 표 3	5.18의 시각적 재현: 사진·영상기록을 중심으로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원)
	총 합 토 론	이기본(사진가 겸 포토 테크니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I 한국기록학회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사회 : 김하나(명지대학교)

[CONTENTS]

발 표 : 기록관리에서 기록혁신으로	18
/ 곽건홍(한남대학교)	
발 표 :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20
/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발 표 :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22
/ 김익한(명지대학교)	
종합토론	
/ 이영남(한국기록학회), 손동유(한국기록학회)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발 표 1.

기록관리에서 기록 혁신으로

곽건홍

한남대학교

Keywords

기록, 아카이브, 기록 수집기관, 아키비스트, 역사가

지난 20년간 기록학과 기록관리 현장은 기록관리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아카이브와 기록관의 설치, 기록관리법과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변화 등 그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중장기계획(안)’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데이터형 기록의 생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에 매몰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업무에서 기록서비스는 강조되지만, 정작 ‘기록’을 어떻게 조직해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기록을 기술하는 업무는 표준으로만 존재하고, 실행되지 않는다. 아카이브에 “아키비스트가 없다”는 자조적인 표현을 들은 지 오래다.

기록학 연구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은 물론이고 학술지에 게재되는 글들은 대부분 기록관리방법론, 기록관리 인프라에 집중한다. 또한 학문의 초창기가 지났음에도 외국의 기록관리 방법론은 모방해야 할 기준으로 설정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된다. 기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기록관리방법론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록관리제도는 분명 20세기에 비해 발전했다. 기록학계의 논의 또한 기억 담론을 수용하고, 사회적 기억을 구축하려는 문제 제기와 실천이 있었으며, 일상 아카이브·공동체 아카이브 등 다양한 아카이브로 주제를 확장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기록열람실에서 기록을 조사하는 현대사 연구자가 있을까? 시민들이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방문하지만, 지하층에 기록열람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아카이브는 여전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아카이브의 주체인 ‘기록’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지난 20년의 변화는 미약하다. 따라서 기록을 주체로 설정한 정책 전환, 곧 미시 전략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기록을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역사가이다. 특히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은 현대사와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역사가를 비롯한 현대사 연구자를 위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의 업무가 재편되어야 한다. 남겨진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 조사, 정리·기술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록을 해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를 양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스페셜리스트로서 현대사 연구자를 지원해야 한다. 기록학과 또한 기록 조사방법론과 아카이브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방법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아카이브학 과정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 수집기관들 사이에서 기록을 중심에 놓고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사편

찬위원회 등에는 한국현대사 관련 기록이 다량 수집되어 있다. 이들 기관 사이에서 국가기록원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장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한국현대사 기록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아카이브 허브 구축 등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 조사·연구, 한국적 기록관리 모형을 창출하는 토대 역할을 할 국책연구기관의 설립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국가기록원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기록원과 기록관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 혁신으로의 정책 전환은 현용기록과 기록관 중심의 법령체계 재검토, 국가기록원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통한 기록 분권화와 아카이브 기능 강화, 기록연구직의 역할 다변화, 기록학 대학원과정 개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이 시대의 아카이브 철학을 정초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록 혁신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다면, 우리 시대에 ‘아키비스트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발 표 2.

현대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현실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Keywords

기록관리, 텍스트와 컨텍스트, 기록 서비스, 역사연구

1. 역사 연구는 기록 관리로부터 시작한다. 1차 사료에 의존하는 역사 연구는 기록의 존재를 통해 연구의 공간을 넓혀간다. 체계적이고 접근·이용 가능한 기록이 존재할 때에만, 사실 규명과 해석을 추구하는 역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기록이 역사 연구의 사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 사료로 전환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록이 담고 있는 텍스트의 중요성이다. ‘중요한 기록이란 중요한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텍스트를 담고 있는 기록은 역사연구에서 사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2. 텍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록 생산의 맥락이다. 생산 맥락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문서는 텍스트의 올바른 독해를 방해하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역사 연구에 이용되는 기록에 대한 관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의 기록관리와 사료에 대한 접근은 텍스트에 경도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과 국외 아카이브가 수행하고 있는 기록 관리와 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아카이브의 기록 관리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기록 ‘관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수행되는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4. 한국의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기록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이 기관들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현재 이 기관들은 매우 많은 분량의 1차 사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록 서비스는 텍스트 중심이다. 기록에 적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텍스트 중심의 기록관리 인식은 텍스트를 식별할 수 있는 검색(keyword) 기능을 서비스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서 생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문서 생산기관의 업무 내용과 그 변천 과정, 타 기관과의

관련성 (2) 업무에 따른 문서의 종류 및 계층 구조, 이본(異本), 복본(複本)의 존재 유무 (3) 중요 종사자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6. 문서 생산 맥락 정보는 기록 서비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된다. (1) 문서 계층 구조의 구현 (2) 문서 계층 각 단위(문서군, 시리즈 등)에서의 문서 해제

7. 온라인 서비스 문서 생산의 맥락이 파악되지 않는 기록 서비스는 역사연구가 파편적이고 발췌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근원이 된다. 구조와 사실 간의 연관 관계 보다는 단편적인 사실이 실제 연구에서 우위성을 갖게 된다. 물론, 기록 서비스의 한계가 직접적으로 역사 연구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 관리에서 연유하기 보다는, 역사 연구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역사 연구물은 몇 가지 이용 가능한 일부 사료들을 끄집어내고 편집하여 적당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의 생산력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보다는 직업적 역사연구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억, 기록, 역사, 그 융합의 과제 / 한국기록학회

발 표 3.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을 위하여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s

아카이브, 사회현상, 아키비스트, 재구축

1.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아카이브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형성, 그리고 근대적 관료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두 목적에 복무하였다. 근대 아카이브의 이러한 태생적 성격은 각국의 아카이브를 국가주의 아카이브, 기능적 아카이브의 경향으로 진화하게 했다. 젠킨슨주의의 기록관리 방법론은 이러한 근대 국가의 본질적 성격에 조응하는 아카이브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국가의 정당성을 공표하는 아카이브와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관리가 근대 기록학의 주류로 자리 잡고, 기록 현장 역시 이러한 담론적 특성을 그대로 연출하게 되었다.

2. 68혁명 이래 표출되기 시작한 근대 부정의 문제의식들은 아카이브의 유동성, 근대국가의 가치로 수렴될 수 없는 맥락들에 대한 주목, 아카이브의 표시된 텍스트로는 말해지지 않는 유령적 존재에 대한 존중, 구조기능주의의 효율 지향적 속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코의 고고학적, 계보학적 아카이브 읽기, 데리다의 차연과 유령의 개념 대두, 바우만의 리퀴드 현대에 대한 주목, 스피박의 서발턴의 말할 수 없음에 대한 문제제기, 이진경의 집합적 기억과 소수자의 역사, 들뢰즈의 역사를 쓰지 않는 유목민의 현대적 의미 등 새로운 담론들의 출현은 아카이브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데 충분했다.

3. 현대 기록학은 기록 실천주의라는 문제의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8혁명의 반근대적 담론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브를 주장하는 기록 실천주의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아카이브에 대항하는 흐름을 비국가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구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아카이브를 구축해가려는 힘겨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도가 국가 아카이브의 태생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힘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4. 한국의 아카이브는 선진 사례를 급히 수용하는 과정에서 68혁명 이후의 유럽의 경향에 주목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무비판적으로 기능주의적 신젠킨슨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아카이브 없는 기록관리의 경향을 질게 띄게 되었다.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관리,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록관, 영구기록관리기관의 기형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화, 방법적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카이브의 내용에 천착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법률지상주의적 기록관리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개별 아키비스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보자면 아카이브가 권력과 행정 관료주의에 복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아감벤의 근대적 법 정신과 질서가 지니는 공고성과 결과적 폭력성에 대한 지적은, 광장에서의 아카이브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근대법적 국가 아카이브체제를 전복하는 기록 실천주의로의 전변을 생각해보게 한다.

5. 현대적 담론들을 수용하고 권력화, 제도화된 박제물로서의 아카이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면적 해체와 재구축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능주의에 의거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신뢰한 덕분에 우리는 의미 있는 기록들이 누락된 국가 아카이브의 현상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심지어 참여정부 이후 보존된 기록들까지)을 열어보며 느끼는 허망함은(물론 파편적으로 핵심 내용을 담은 기록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박제물만 남은 기록 현상의 배후에 권력화, 제도화에 대한 무비판이 숨어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비판은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 해체와 재구축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6. 해체는 행적적 요구에 응한 공문서 관리 및 보존과 시민 사회적 요구에 응한 아카이브의 분리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관리로부터 스스로 해체된 아카이브는 허위로서의 설명책임의 개념을 탈각하고, 사회적 기억으로서 아카이브 행위를 재구축하는 방향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현행의 기록관을 해체하고 행정적 요구에 응한 공문서 관리는 행정에 넘기는 대신,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성의 사회적 기억을 확보하는 재구축의 시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증거로서의 기록은 행정에게,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기록은 아카이브에게 돌려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7. 이러한 재구축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공공사회의 해묵은 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아카이브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존재공익침해심판제도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제도 통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것이 꼭 아카이브계에서 풀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현재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행정사무기본법을 제정하려 했던 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 기록법에서는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아카이브에 집중하고 기록 생산이나 증거의 확보 등의 문제는 시민 거버넌스를 포함한 행정관리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8. 등록분류편철 및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생산통제의 방식 역시 행정사무기본법의 영역이다.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이관체계 역시 해체의 대상이다. 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아카이브는 행정적 판단에 의해 생산 시점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관점에서의 공공성의 기억이라는 차원에서 서사적으로 재구축된 선별수집실행전략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사회학에서의 횡적 서사, 역사학에서의 종적 서사,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인류학적 서사 등이 적극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 각급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들은 스스로 이러한 선별수집실행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록을 거시적으로 위치하며 사회적 기억을 재구축하려 시도해야 한다.

9. 사회현상이나 사회 구성 주체들의 활동과 일상은 국가 행위를 상대화할 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공공성을 지닌다. 국가 아카이브는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아카이브를 대규모의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 포괄되지 않는 대규모의 사회현상에 대해 지속적 아카이빙을 시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로써 행정 아카이브와 시민사회 아카이브의 네트워크라는, 개별 주체들의 각자성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 아카이브 체제의 재구축이 시작될 수 있다.

10. 아키비스트는 시민사회와 호흡하며, 연구하며, 서사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억체로서의 기록을 수집함과 동시에, 소통을 위해 글을 쓰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자이다. 법률지상주의적, 방법 중심적 아키비스트에서 내용과 소통에 주안을 두는 콘텐츠, 컨텍스트 큐레이션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 적어도 현상을 읽어내고 분석하며, 기록을 읽고 내용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 능력을 갖춘 아키비스트,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을 기본으로 하되 주제 아키비스트로서의 세부적 전문성을 갖춘 아키비스트, 조직과 국가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시민에 복무하는 아키비스트의 상을 재구축하는 것 역시 현대 아카이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11. 사회공공기록기본법, 행정사무기본법으로 기록 영역을 분할 해체하고, 아카이브 체제를 사회공공기록기본법을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고민을 시작할 때다.

I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사회 : 최연희(정말기록당)

[CONTENTS]

발 표 : 민간 아카이빙의 확산과 성장	25
/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발 표 : 기록 활동 현장에서의 단상	27
/ 배은희(빨간집)	
토 론 : 민간 아카이빙 연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백숙희(청주 두껍말기록단)	
김영규(철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 표 1.

민간아카이빙 확산과 성장 그리고 활동가연대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Keywords

민간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 기록관리법, 기록활동가, 민주주의

1. 기록에 대한 관심은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는 정치영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귀결되어 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 관련한 사회적 논의, 대학 내의 강의평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분명히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다. 이들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나, 예상 또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취지를 의심할 일은 아니다. ‘민주화’는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 또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이 법들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성과들 중 일부이다.

시민들은 그러한 법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뭔가 행정에 의문이 생기거나 항의할 일이 있으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질문하고, 항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법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점차 완결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거나, 현재의 법대로 실제 운용이 되고 있는지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시민 역량의 성장과 아카이빙

시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 차원 보다는 연대를 모색하며 이루어져 오고 있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관은 시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된 시민 역량에 대하여 협치의 파트너로 대하고 있고, 때로는 그런 파트너를 의식적으로 육성하기도 한다.

시민들의 조직된 역량은 삶의 건강성은 물론이고 지역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스스로 활동 내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오고 있고, 그러한 일환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이 성장하면서 개인, 공동체, 지역 및 그 관계와 활동 등에 대한 기록의 소중함이 인식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카이빙을 시도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최근 20여 년 가량의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손쉽게 자료를 만들고(문자, 이미지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와 기록을 유통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과 공간에서 소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지혜를 나누고 있다. 일상적으로 기록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기록을 평가하며, 일상적으로 기록이 축적되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기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현대인들은 누구나 기록의 생산자이자, 기록관리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3. 변화된 기록 환경, 법과 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우리에게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것은 틀림없다. 법 제정 이후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맞이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급격한 기록 환경의 변화,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전문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지방(및 민간)기록관리의 체계적 시행의 필요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게 하였다.

‘법(法)’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를 정의하고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록관리법이 민간아카이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현재의 기록관리법을 개정해서 민간 아카이빙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아카이빙과 관련된 법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또한 법이 필요하다면 법에 담길 지향, 목표, 핵심 조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민간아카이빙 현장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 및 지방기록관에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아카이브”,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민간아카이브” 등의 표현을 별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다. 관이 주도하는 마을아카이브?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민간아카이브? 과연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4. 기록활동가 연대의 필요성

전국적으로 기록관리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형은 다양하다. 엄연히 현장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제도, 행정은 정확하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첫 단추를 채워 나갈 사람은 기록활동을 하는 당사자들이라고 본다. 2019년 7월과 10월, 두 번 무작정 모여서 서로의 형편을 대화 나누고 공감한 이후 2020년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갈 것을 약속했으나, 이어지는 만남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미뤄지고 있다. 다만, 몇몇 지역 활동가들 중심으로 “(가)한국기록활동가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초보적 모임을 꾸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정기모임, 민간 아카이빙의 노하우 교류, 기록활동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 공동대처, 기록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 대응’ 등의 공동 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문별 소규모, 지역별 모임 조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총회 및 세미나 개최’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영역의 기록활동가들이 스스로 기록활동을 시작했듯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제를 ‘기록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막 발을 내딛고 있다. 기록학, 기록관리, 아카이빙 등의 이름으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

민간 아카이빙! 협력과 연대 모색 / 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 표 2.

기록 활동 현장에서의 단상

배은희

빨간집,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

Keywords

민간아카이브, 기록문화, 기록활동가

1. ‘기록이란 무엇일까’ 라는 뻔한 듯 하지만 어려운 질문

‘기록하고 책 만드는 빨간집’은 2인의 활동가로 구성된 부산의 소규모 기업이다. 구술 수집사업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글쓰기를 통해 동시대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함께 기록할 동료들을 늘리기 위해 ‘도시기록자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기록문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어디든 기록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록학 전공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뒤늦게 결합한 주제에 어느새 전문가로 불리고 있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기록을 궁금해하는 이들을 만날 때는 무척이나 반갑다.

길지 않은 활동 기간이지만 다른 민간기록 활동가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우리도 경험이 쌓이면서 이리저리 고민도 쌓여가는 중이다. ‘기록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뻔하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가의 의견을 함께 모아 몇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자 한다.

2. 기록활동에서의 단상

- **기록 대상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지를 중심으로 구술 수집과 기록 사업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기록해오지 않았던 마을의 이야기는 새로운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관들의 관심도 커졌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이 마을기록화의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간기록=마을기록이라고 여겨질 만큼 민간기록의 주제가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유행하고 소비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역사, 문화, 경제, 여성, 인권, 사건,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기록할만한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기록들도 많고, 사라지지 않더라도 동시대를 반추하는 역할을 할 기록 대상도 많다. 마을기록의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이는 최근 많아지고 있는 ‘마을아카이브 학교’, ‘시민기록자 학교’ 등으로 불리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있는 민간 기록활동가들의 협력과 논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록의 활용과 공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껏 시간과 노동을 들여 기록을 했는데, 결과물이 자족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마을기록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결과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시민청에서 ‘서울책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책방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간행물을 일반 도서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담은 간행물을 시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기록물 또는 이를 활용한 결과물들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가치 있는 기록은 영구보존할 수 있는 거점 또는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록물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는 가능해질 것이다.
- **기록 활동의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몇 해 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세종특별시가 생김으로써 사라질 마을들을 기록한 전시가 있었다. 그 전시에는 사라질 마을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을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 기록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우토로 아카이브 사업이나 IMF 아카이브 사업처럼 자체 예산 또는 펀딩을 통해 목적성이 분명한 아카이브를 구축해가는 좋은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콘텐츠 생산의 관점으로 진행되는 기록 사업이 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록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록은 과거의 이야기만을 발굴하고 박제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이어져 있으며, 어떤 미래로 가야할지 모색하는 단서를 찾는 일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현재에 대한 기록이 가감없이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 또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며 오히려 틀에 갇히는 경험을 했다. 민간기록의 보존, 정리, 평가, 지속성 등에 대한 프로세스와 요건 사항 등에 갇히다 보면 생산해야 할 기록물에서부터 한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민간기록만큼은 다양한 상상력과 표현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물론 증거적 기록으로 원본 기록과 신뢰성을 가진 기록물의 확보와 보존이 중요한 기록 활동도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기록관리’가 중요하구나를 다시 상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기록 수집의 문제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기억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기록물의 유형에서부터 수집대상과 방식에 상상력을 좀 더 부여한다면 기록이 좀 더 재미난 일이 되지 않을까. 기록이 기록을 낳고, 현재가 계속 기록되는 방식에서 기록 활동의 지속성도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

3. 이런 고민의 해결이 가능해지려면

일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록인 대회에서 여러 사례가 발표되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발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기록 활동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재미난 또는 의미 있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학계에서의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이론과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민간기록 철학과 사례, 기록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의 일상적 교류의 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I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사진과 기록

사회 : 미정

[CONTENTS]

- 발 표 : 사진술, 근대적 기록 방식의 탄생 30
/ 박준석(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 발 표 : 사진의 기록적 가치: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32
/ 김태현(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발 표 : 5.18의 시각적 재현: 사진·영상기록을 중심으로 34
/ 유경남(전남대 5.18연구소 연구원)
- 종합토론
/ 이기본(사진가 겸 포토 테크니션)
/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발 표 1.

사진술, 근대적 기록방식의 탄생

박준석

사진 기록과 아카이브 연구자 모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Keywords

사진술, 과학, 기록, 아날로그 사진, 디지털 사진

1.

역사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자연환경의 극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사회의 변화라는 상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사고는 근대의 과학적 합리주의를 통해 단단해졌으며,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발전이 기술의 진보 또한 촉진 시킨다는 사고방식도 함께 형성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기록의 내용과 형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록 방식은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근대적 인간의 역사가 곧 과학과 기술의 역사라는 사고는, 근대의 기록매체가 기술에 의해 규정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록 기술이 사진술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중세 말기 인쇄술의 발달이 기록의 생산과 전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근대적 기록방식의 혁명은 사진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사진이 탄생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2.

사진은 근대가 이룩한 과학기술과 인식론의 산물이다. 최초의 사진은 1826년경 프랑스의 발명가 조셉 니엠프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아스팔트(Bitumen)를 칠한 동판에 8시간 노광을 주어 제작되었다. 그의 동업자 다게르는 1839년 사진의 감광제를 요오드화은으로 바꾸어 촬영 시간을 약 15분까지 단축하였다. 두 사람의 사진 기술 중에서 공식적인 최초의 사진술로 선택받은 것은 다게르의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니엠프의 사진은 당시 화학 기술의 한계로 인해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출이 필요했고, 그 결과 그의 사진에 담긴 기록의 대상은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모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의 사진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노출시간의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화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였다. 이 당시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사진 기록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기록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후 사진술은 계속 발전하여 1851년에는 콜로디온 습판으로 노출시간을 15초로, 1871년에는 유리건판 기술로 노광시간을 1초 이하로 축소시키면서, 비로소 ‘순간의 선택’이라는 사진술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당시 초상사진이나 풍경사진, 심지어 전쟁사진에서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초기 사진 기록의 정적인 느낌은 장시간 노출이라는 사진술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사회에 대한 사진 기록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3.

화학 기술의 개선 속도에 비해 카메라의 발전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다. 사진의 대중화가 시작된 것은 1888년 미국에서 코닥이 10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찍을 수 있는 박스형 카메라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죠”라는 코닥 광고의 카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술의 복잡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기업이 대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사진의 대중화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때까지도 카메라는 여전히 박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의 디자인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1890년대 휴대가 간편한 접이식 카메라의 등장은 사진의 기록범위를 또 한 번 확장해주는 사건이었다. 곧이어 광학적이고 기계적인 정밀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36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촬영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가 등장하고,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플래시 전구가 발명되면서 1920년대 말부터는 사진 저널리즘 잡지를 중심으로 사진의 전성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다.

컬러사진의 발명은 사진에 리얼리티를 강화해 주면서 기술적 복제성에 기반한 사진 기록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1861년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이 처음 컬러사진을 만들었고, 1907년 루미에르 형제가 오토크롬을 발명했으며, 1935년에는 코다크로 컬러필름이 탄생하였다. 1970년 이후 제작된 사진의 90% 이상이 컬러사진이고, 사진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보도, 예술사진도 70% 이상이 컬러사진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사진술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사진의 신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사진은 빛을 이용해 읽어낸 기록 대상의 정보를 전자적인 신호로 전환시켜 파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나 사진, 심지어 입체적 오브제까지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캐닝 또는 디지털 촬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스캐너가 형태만 다른 디지털카메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C.C.D(또는 C.M.O.S)로 불리는 반도체를 이용해 빛을 전자 신호로 전환하는 기술은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생성한 파일 또한 상호 구분 없이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화된 모든 기록은 사진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이를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종이 기록을 포함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모든 기록은 사진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디지털시대 기록물의 기술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술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전통적인 사진술로 생산된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과 인화물이 있고, 아날로그 기록물을 스캐닝하여 생성한 디지털 파일과 출력물이 있으며, 처음부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생산한 기록물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의 파일화,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화이다.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상관없이 이제 사진은 공공의 영역에서 기록적 가치와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대부분 디지털 파일로 전환되어 아카이빙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진술의 탄생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근대적 인식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실의 재현과 객관적 기록을 요구하는 근대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사진 기록이 지닌 시대적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위해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발 표 2.

사진의 기록적 가치: 가족사진을 중심으로

김태현

사진 기록과 아카이브 연구자 모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Keywords

사진, 기록, 재현, 가치, 가족사진

1.

프랑스 정부가 사진술의 저작권을 사들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세상에 공표한 건 1839년의 일이다. 당시 사진술은 발명이 선포되자마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져다 사용할 만큼 대중적인 기술이었는데,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사진술이 그 어느 것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래서 이성적인 재현을 보장해 주는 근대적 신기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계적 복제성으로 인해, ‘사진은 현실을 사실로 반영하는 과학’이라는 믿음이 대중적 진리 체계로 쉽게 전환되었고, 이러한 믿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진에 담긴 재현의 대상을 원본과 같은 의미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사진을 가장 근대적인 기록매체로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정에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에서 아직도 유효한 의미를 지닌 채 유통되고 있다. 근대 이후 우리의 중요한 역사는 많은 부분 사진술을 이용해 기록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진 기록은 멈추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진에 대한 많은 담론들은 사진술을 통해 이미지로 고정되는 ‘기록의 대상’에 집중되어 왔다. 즉 사진에 기록된 역사와 대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규명하는 게 사진담론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사진의 신화’, 즉 ‘사진으로 기록된 것은 진실’이라는 근대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사진을 기록의 매체로 이해하는 기록학·업계도 이러한 전통적 사진 담론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기록학·업계가 사진 기록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사진 이미지에 담긴 대상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여 메타데이터에 반영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방법론으로 진화해 왔다. 이는 사진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과거를 들여다보는 순수한 창문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방식. 즉 사진을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도구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2.

사진이 기록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것은 먼저, 사물의 질서에 맞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진 중에서 일부가 수집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 아카이브에 있는 사진 중에서 일부가 특별한 이유로 선별되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다시 말해 사진은 아카이브 안으로 편입되는 첫 번째 과정과 아카이브 밖으로 진출하는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기록적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아카이빙’이라는 단어로, 후자는 ‘큐레이팅(혹은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카이빙은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을 물질적인 상태(사진 필름이나 인화지, 혹은 디지털 파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실천’이고, 큐레이팅은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제기하는 ‘재현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이 기록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개의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들은 사진을 기록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진기록을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3.

시인 안도현은 자신의 에세이 『사진첩(1998)』에서 가족사진은 너무 경건해서 애국가라도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가족사진은 한 시절의 행복의 척도” 이면서 “가족사의 유일한 물증” 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가족사진조차 그것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감수성 때문에 사적인 의미를 능가하는 아우라가 깃들어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가족사진은,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의 그물망을 재현한다.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은 사진을 통해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것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결국 사진으로 재현되고 있는 대상이 현재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불편한 사실, 즉 ‘부재의 증명’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족사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감정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인한다. 이는 사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현존하는 우리가 이미 사라져 버린 과거의 존재들과 대면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라진 존재는 망자(亡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나의 모습 또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존재이다. 이렇게 가족사진 안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는 경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선사한다.

지난 10년 간 개인적인 가족사진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 시각적 공론의 장으로 호출되어 나오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이미 가족사진 안에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의 엔트로피(entropy)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영역을 넘어 공공의 장으로 나오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가족사진이 어떠한 의미작용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시각적 서술로 작동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역사와 사진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역사와 사진은 모두 과거를 대상으로 ‘과거를 재현’하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며, 따라서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의 존재를 ‘부재의 증명’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관계성을 맺게 된다.

4.

이번 발표에서는 사진이 지니고 있는 기록적 가치를 사진술이 발명되었던 19세기 유럽에서부터 사진매체가 보편화된 현재의 사회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대기 순으로 검토하고, 가족이 사진이라고 하는 근대적 기록매체를 통해 어떤 의미를 재현해 왔는지 살펴본다. 근대 이후 가족은 친족을 넘어서는 집단적 공동체의 의미로 재구성되기 시작하고 이는 곧 집단기억으로 환원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바로 계급과 국가, 인종공동체라는 허위의식으로 확장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가족사진 기록을 통해 사진이라는 기록매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재현되고 아카이빙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진이 지니고 있는 기록적 가치와 의미, 역사성에 접근하려고 한다.

사진과 기록 / 사진기록과아카이브연구자모임

발 표 3.

5·18의 시각적 재현 : 사진·영상기록을 중심으로

유경남

사진 기록과 아카이브 연구자 모임(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Keywords

5·18, 재현, 사진, 영상

1.

1980년 5·18항쟁의 기록들은 ‘1980년 5월 광주’라는 시공간적 경계를 뛰어 넘어 확산되어야 하는 각 주체들의 현실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광주 지역의 시민들과 저항세력들은 5월 27일 이후, 계엄군의 폭력-항쟁이라는 경험이 끝난 이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보았던) 사실들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실들을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전달해야만 했다. 특히 정부와 언론이 시민들과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과의 경쟁 속에서 더욱 사실적인 증거들을 보여줘야 했다.

이에 반해 신군부 세력은 ‘국가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전국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리고 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의 증거로써 ‘광주의 모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위기에 빠진 광주를 구출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정치적 주체로써 신군부의 면모를 전국에 홍보했다. 이렇게 항쟁 이후, 항쟁을 설명하는 전략에 따라 항쟁의 사실과 이들의 인과관계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재현맥락은 항쟁 이후의 사회구조에 따라, 그리고 당대의 정치·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지각적 재현은 항쟁 이후, 항쟁을 설명하는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적 인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각’이라는 주체의 행위와 ‘이미지’라는 매체의 의미성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5·18항쟁의 재현은 문자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공간이라는 매개물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문자의 경우 역사적 기록이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사진과 영상 그리고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매체들이 항쟁과 항쟁 이후 사회적 주체나 그들의 기억 또는 재현물 자체가 가지는 매체/도구적 속성에 주목한 경향이 있다. 예컨대 소설이나 사진, 공간 그 자체가 가지는 재현적 속성으로써 ‘5·18항쟁’의 경향성(또는 외면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은 5·18항쟁을 재현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주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5·18항쟁에서 가족은 실재하는 대상이다. 항쟁 당시 그리고 항쟁 이후 사망자와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와 이미지의 현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이었다. 또 이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사진과 이미지 속에서 현재의 실존과는 별개로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진(사진을 보는 것)은 대상을 이미지/재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현실을 구성하며, 재현과 현실 사이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미지의 가치를 묻는 질문을 하게하고, 보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사진과 이미지가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3.

당시 언론은 광주를 파괴와 폭력의 도시로, 시민들을 폭도와 불순분자로 묘사했다. 그런데 5월 27일 광주를 무력 진압한 이후에는 광주를 피해와 복구의 대상으로 ‘비정상상을 정상화’ 시키는 주체로서 광주 외부의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1980년 항쟁 직후 정부는 <안정만이 살길>(대한뉴스 1284호, 1980년 5월 29일), <활기 되찾은 광주>(대한뉴스 1285호, 1980년 6월 3일)와 <1980 새 시대를 연다>(국립영화제작소, 1980년)라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안정만이 살길>은 “국토분단의 현장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시작으로 “6·25 뼈저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영상은 학생들의 시위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광주사태”로 파괴된 광주의 모습 꼼꼼하게 보여준다. 특히 영상은 (일본 NHK방송의 영상을 인용하며) “광주에서 참으로 엄청난 사태”, “난동”이 벌어졌으며 “혼란은 적의 침공을 자초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 시대를 연다>에서는 “복면을 하고 있는 폭도”, “불이 난 차를 시위에 사용하는 시위대”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국가위기상황을 재현한다. 나아가 이 영상은 “5.17이 국가와 민족을 혼란과 복괴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보위하는 결단”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영도자(전두환 대통령)필요”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1980년 9월 신군부의 전두환이 새 대통령으로 등극한 명분을 “광주사태”를 통해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4.

1987년 6월항쟁 이후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민주화운 세력은 사진첩, 사진 전시회, 동영상 등을 만들어 확산시켰다. 이들 개개 이미지들과 이미지들의 나열방식은 항쟁의 명분을 “계엄군의 선행된 폭력과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확보한다. 여기에서 상무관은 항쟁 당시 신분 확인된 희생자의 관을 한데 모으고 가족들과 시민들이 애도를 표했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표정하거나,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가족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특히, 당시 광주에 대한 기사와 함께 독일잡지에 실렸던 ‘꼬마상주’ 사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자의 가족’의 위치에 함께 서게 만든다. 1987년 이후 시각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가족은 보다 직접적이고, 사진 내에서 혈연적 가족관계를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들이다. 이는 기존의 5·18항쟁의 사진들이 다수의 사람들, 익명성이 보장된 공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지극히 개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배열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시위 대중의 모습이 아니라, 시위 대중 희생자의 “어머니와 아들”과 같은 가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쟁의 서술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기존의 항쟁의 서술은 계엄군이나 신군부라는 지배집단과 학생, 시위대중, 광주 시민 등 집단과 집단의 대결구조 속에서 항쟁의 전개과정을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시기 항쟁에 대한 서술들은 희생자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정리되었다. 이러한 가족적 관계성의 시각적 재현의 장소로 등장하는 장소가 ‘망월동 묘지’이다. 이전의 이미지가 잔인한 희생자의 시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면, 이들이 묻힌 망월동 묘역의 사진, 그리고 희생자의 생전 사진이 함께 나열되기 시작했다.

제 2 회 의 장

시 간	일 정	
10:00 - 12:00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사 회	미정
	발 표 1	국가기록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 개선방안 (설문원/부산대학교)
	발 표 2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 표 3	국가기록화의 관점에서 시민참여평가의 설계 (이경래/중앙대학교)
	총 합 토 론	이승억(국가기록원), 문찬일(국가기록원)
13:30 - 15:30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사 회	김유승(중앙대학교)
	발 표 1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직무역량 연구 (전보배/부산교육대학교)
	발 표 2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양성·교육제도 연구 (윤은하/전북대학교, 박태연/전북대학교)
	라 운 드 테 이 블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성주영/국가기록원)
16:00 - 18:00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 회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 표 및 토 론 1	기록관리혁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발표: 황진현(한국외대) 토론: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발 표 및 토 론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자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전 발표: 이준봉(법원기록보존소) 토론: 이철환(대통령기록관)
	발 표 및 토 론 3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3단계 프로세스 고찰) 발표: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토론: 문찬일(국가기록원)

I 국가기록평가연구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사회 : 미정

[CONTENTS]

발 표 : 국가기록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 개선방안	38
/ 설문원(부산대학교)	
발 표 :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40
/ 현문수(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 표 : 국가기록화의 관점에서 시민참여평가의 설계	41
/ 이경래(중앙대학교)	
종합토론	
/ 이승억(국가기록원), 문찬일(국가기록원)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발 표 1.

국가기록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eywords

국가기록화, 기록평가, 기록평가정책, 기록처분기준서

1. 과제 개요

본 연구팀은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국가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 다매체, 분산환경에서의 전자기록 평가모형 개발』)를 추진 중이다.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는 생산된 기록 중 무엇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자 실무다. 이 과제의 목표는 급변하는 전자기록 생산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록 평가정책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규범 가치를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업무가 다매체·복합 형식의 기록을 양산하고 있고 분산적 환경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채택할 때에는 국가기록관리의 규범적 가치의 틀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규범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매체·분산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는 이 세션의 다른 발표의 배경에 해당한다. 본 연구팀이 설정한 국가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구조틀 안에서 각론에 해당하는 각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표 내용은 설문원, 이승익의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2020)를 토대로 했음을 밝힌다.

2. 공공기록 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

국가기록원은 범국가 차원에서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법규에 따라 기록을 생산·관리하고 필요한 동안 보유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폐기하거나 이관하도록 감독할 책임을 지며, 이를 통해 국가기록화(national documentation)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관(national archives)은 한 나라의 공적(公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명을 가지며 그 역사를 어떤 기록으로 어떻게 남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가기록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결국 기록평가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행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업무 효율을 촉진하고 정보로 인한 조직의 위험을 완화하며 대내외적 설명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 평가처분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공공기록 평가제도는 다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가기록화의 기준과 방향을 천명하는 정책문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보존기록의 선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가 어떤 기록을 남기려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기록을 평가·처분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인 ‘처분기준서(disposition authority)’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기록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의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이행할 수 없다. 상위 정책 및 법규에 맞게 평가·처분을 실시하고, 국가기록관리기관이 이를 감독·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셋째, 평가의 대상, 평가 및 처분 시점, 처분지시 결정 등 평가를 이행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처분기준서의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평가 주체별 책임과 권한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기록생산자, 시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과정에서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역할은 본 연구과제에서 특히 강조하는 대목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내용은 법령에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평가정책서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기록화의 방향과 기준, 처분기준서의 개발과 운영, 평가절차의 설계,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정책요소들이며 각 요소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상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정책문은 설명책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을 선별·보존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릴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평가제도에서는 ①평가정책과 평가기준, ②처분기준서가 잘 작성·운영되고, 이를 이용한 ③평가 처분 실무 절차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④평가 대상이 평가의 목적에 맞게 잘 설정되고, ⑤평가·처분 주체별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할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요소들이 모순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발 표 2.

국가기록평가의 관점에서 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현문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Keywords

국가기록화, 기록 평가, 평가선별, 기록관리기준표, 평가도구

1. 연구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록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공표된 기준은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시행령 별표1)’ 과 기록관리기준표이다.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범 공공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영구보존부터 1년 보존에 이르는 7종의 범주별로 해당 보존기간이 할당되어야 하는 기록물 유형과 특성을 지시한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개별 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BRM 등의 업무기능분류체계의 가장 하위 계층인 단위과제별로 7종 중 하나의 보존기간을 지시한다.

법령에 따라, 평가와 처분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업무 기능의 계층과 일치시키면서도,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과정에 보존기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특정한 역할 수행하거나 특성을 지닌 기록물을 식별하여 지시된 보존기간을 할당하도록 한다. 이처럼 현재 국가기록화 방향을 지시하는 평가 도구는 기관에서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을 결정해야 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국가기록 평가도구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의 국가기록평가 관점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분석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주요 초점은,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평가에 두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에 앞서 국가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범주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이를 각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행 체계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의 범위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및 영국 중앙 및 연방기관 중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록 평가 도구(기록 일정표, 기록 처분 권한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하는가? : 기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국가기록평가연구

발 표 3.

국가기록화의 관점에서 시민참여평가의 설계

이경래
중앙대학교

Keywords

시민참여형 평가, 평가 도큐멘테이션, 공공 컨설팅,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평가심의회

최근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발표는 국가기록평가의 속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협치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절차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제도와 정책 과정 속 시민들의 참여를, 특히 기록물 평가과정이란 틀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한다.

오늘날 정책과 행정 영역에서 ‘협치(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민관 협치 정책을 위한 시민참여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무원로서 기록평가 업무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기록화 및 공개는 아직 많이 미흡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공공 기관들은 평가의 기준과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설명책임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는 시민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전제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기록관리 영역에서 평가 주체로서 시민들 스스로 개입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컨설팅(협의), 그리고 영구보존기록 수집 및 기록폐기 금지의 의제를 시민 스스로 발의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포용성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라 아니할 수 없다.

본 발표에서는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팅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규정한 4개 공공기록 평가의 유형을 시민참여형 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이 시민참여형 평가의 기준에서 볼 때 갖는 한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데 집중한다. 적용 방안으로는 보다 철저한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평가심의회(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대상)의 제정립, 공공 컨설팅의 피드백을 반영한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평가심의회설치의 확정, 그리고 영구기록물수집 및 기록폐기금지 주제의 시민발의권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I 한국기록관리학회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사회 : 김유승(중앙대학교)

[CONTENTS]

- 발 표 :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직무역량 연구 43
/ 전보배(부산교육대학교)
- 발 표 :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양성·교육제도 연구 44
/ 윤은하(전북대학교), 박태연(전북대학교)
- 라운드테이블 :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김지현(이화여자대학교)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성주영(국가기록원)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발 표 1.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직무역량 연구

전보배

부산교육대학교 기록연구사

Keywords

디지털, 기록전문직, 직무역량

본 연구는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의 국내외 기록전문가 직무를 분석하고, 필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디지털 기반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피고, 기록전문직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 표준, 인증 및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의 현 상황에 맞는 시사점을 찾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여러 영역에서 ICT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분석과 적용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도 국내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영역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CT 기술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와 실제 도입 사례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국내외 기록관리 분야 전반에서 ICT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ICT 기반 기록관리에서는 기존과 다른 기록의 생산 환경 및 관리상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1) 기록의 생산량 급증과 생산 유형의 다양화, (2) 데이터의 품질 확보에 대한 중요성, (3) 생산 맥락 기술의 중요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관리 환경에서 국내 기록전문직의 현재 직무와 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추가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기록전문직의 직무와 역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조사·분석해보았다. 여러 문헌 조사 결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록관리 기능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 외에 위험 관리, 정보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리, ICT 기술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개방, 정보거버넌스 체계 구축, 장기보존 전략 수행 등의 전문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록전문직의 필요 역량의 범주도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록의 생산 환경 변화와 가치 해석의 확장으로 인한 기록의 개념 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ICT 기술의 반영과 열린 정부, 정보거버넌스로의 사회적 변화 양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의 기록전문직은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전문직은 IT 언어의 이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다른 전문직과의 협력 능력, 능동성 등의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기록관리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록전문직의 필요 역량 분석을 통해 기록전문직의 양성 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발 표 2.

디지털 다매체 환경의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현황 연구

박태연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전임연구원

윤은하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Keywords

기록관리 교육과정, 기록관리 대학원 교과과정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기록관리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 교원 수 및 교육 인프라, 운영 과정의 형태 및 등록 학생 등 국내 대학원 과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 대학원 교육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향후 디지털 다매체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020년 국내 기록관리 대학원 운영 현황

국내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대학원과 교육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국내에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중인 대학원은 총 25개 대학의 26개 학과이다(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각각 기록관리 과정을 운영 중이다). 25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국립, 17개 대학은 사립이며, 12개 학과는 석사 과정을, 14개 학과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26개 대학원 중 명지대학교(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특수대학원을 제외한 24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4개 대학원 중 11개 대학원은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11개 대학원은 세부 전공, 2개 대학은 단일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 학과의 구성은 대학원 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전산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또는 사학과가 협동 과정을 주도하여 관리·운영 중이다. 세부 전공의 경우 3개 대학은 사학과에서 8개 대학은 문헌정보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 소속 교원은 총 202명으로, 대학원별 소속 교원 평균은 7.8인이며, 최소 2인 최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의 경우 소속 교원의 전공 영역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며, 모든 소속 교원의 전공 영역이 동일한 학과는 총 8개로 문헌정보학(6개 학과) 전공 또는 사학(2개 학과) 전공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중 기록관리학 전공 교원이 소속된 대학원은 5개에 불과하다.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전공 교과목 수는 총 781개이며, 학과별 최소 11개

과목, 최대 67개 과목으로 분포한다. 대학원별 운영 교과목의 수는 소속 교원 수 또는 소속 교원의 전공 영역과는 무관하나,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 교과목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과목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영역의 비율이 전체의 38.9%로 가장 많았고 보조영역(23.7%), 기초영역(2.6%), 연구영역(12.4%), 실습영역(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영역의 세부 영역 중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관련 과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관리 전문직 윤리가치’ 관련 과목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2020년(총 4학기) 동안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실제 개설된 강좌는 총 575개이며, 26개 학과 중 2개 학과는 해당 기간 동안 미운영되거나 2019년 1학기 1과목만 운영되었다. 미운영 학과와 한 학기당 20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된 2개 학과를 제외한 22개 학과의 평균 강좌 수는 17.1개로, 한 학기당 4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 과정의 경우 세부 전공 운영 학과보다 더 많은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설 강좌를 교과목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영역의 비율이 전체의 41.2%로 가장 많았고, 기초영역(25.7%), 연구영역(20.0%), 보조영역(10.8%), 실습영역(2.3%)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운영 교과목 중 기초영역의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영역의 세부 영역 중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관련 과목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개설되고 있었다. 운영 교과목, 개설 교과목 모두에서 ‘실습’ 관련 과목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I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CONTENTS]

- 발표 및 토론 : 기록관리혁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47
/ 발표 : 황진현(한국외대)
/ 토론 :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 발표 및 토론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자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전 ... 48
/ 발표 : 이준봉(법원기록보존소)
/ 토론 : 이철환(대통령기록관)
- 발표 및 토론 :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3단계 프로세스 고찰) ... 49
/ 발표 :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토론 : 문찬일(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 표 및 토 론 1.

기록관리혁신,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발표 : 황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 표 및 토 론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전자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전

발표 : 이준봉

법원기록보존소

토론 : 이철환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관리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 표 및 토 론 3.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재설계 (3단계 프로세스 고찰)

발표 : 김진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토론 : 문찬일

국가기록원

제 3 회 의 장

시 간	일 정	
10:00 - 12:00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씨와 아이들	
	사 회	미정
	발 표 1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윤기원/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발 표 2	공공기록물법에 묻는다.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할까 요? (백수령/경상남도교육청)
	발 표 3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이 가져올 변화 (우지원/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종합 토론	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정상명(경기도교육청), 채지아(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13:30 - 15:30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화정보기술	
	사 회	이동혁(한국문화정보기술)
	발 표 1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기록 전시 사례 (오영단/한국문화정보기술)
	발 표 2	발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김화경/한국문화정보기술)
	발 표 3	온택트(ontact)시대 문화콘텐츠기관 서비스의 흐름과 변화 (정혜지/한국문화정보기술)
	질의응답	

I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한다!

사회 : 미정

[CONTENTS]

발 표 :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한다!	52
/ 윤기원(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발 표 : 공공기록물법에 묻는다.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할까요?	54
/ 백수령(경상남도교육청)	
발 표 :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이 가져올 변화	56
/ 우지원(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종합토론 : 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한다	
/ 정상명(경기도교육청)	
/ 채지아(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발 표 1.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교육청 기록관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

윤기원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Keywords

1인 기록관, 학교, 기관평가, 문서고, 통합기록관

1. 인력 배치의 문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공공기록물법 제41조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배치 비율이 79.6%에 불과하며, 특히 교육지원청에는 59% 정도가 배치된 것이 현재 상황¹⁾이다. 즉, 아직도 상당수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록연구사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인력 배치의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1인 기록관” 체계를 들 수 있다. 각 지역의 교육청 단위에서도 서울시나 강원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양이 상당한데도 “1인 기록관” 체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의 심각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체계의 문제점은 먼저, 법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벅차다는 것이다. 기록관리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을 기관이 큰 곳에 속한 기록연구사 1인이 꼼꼼하게 다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과다하다. 다음으로, 신규로 발령받는 경우 신규 임용자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사들이 개인 사정 상 육아휴직 등을 낼 수 있는데 1인 기록관 체계 내에서 휴직 시 본인을 대체할 인력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쉽게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이 “1인 기록관” 체계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현재의 조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업무가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실제로는 독립적인 팀이나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부서 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의 인력을 배치하고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순환 근무”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은 3년을 주기로 하여 지역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일정 주기의 순환 근무는 그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²⁾는 문제가 있다.

인력배치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1인 기록관”의 타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부분은 각 기관별로 ‘기록관’이라는 조직을 현실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외에, “통합기록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통합기록관의 운영방식이나 인력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작은 규모의 지원청 여러 곳을 묶어 1명의 기록연구사가 관리하거나, 2-3곳의 지원청을 2-3명의 기록연구사가 모여서 일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조삼모사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생각한다.

1) 신원부, 추병주, 임신영. “기록물관리기관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0.62 (2019): 77-107.
2) 임희연.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기록학연구 0.58 (2018): 31-63.

2. 학교 기록물관리의 문제

공공기록물법을 보면 학교의 기록물관리에 모순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이관 여부의 문제이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만약 학교를 자체 보존 기관으로 본다면, 국가기록원에서는 학교 문서고의 관리 조건과 환경 정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관대상 기관이라고 한다면, 먼저 학교의 공공기록물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기록관 문서고의 확충과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학교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기관평가의 문제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기관평가가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유로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비하여 선택지표의 지표 수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재량껏 진행하게 한 부분은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기관평가는 담당자로 하여금 점수를 신경쓰게 하고,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부담감을 지우게 한다는 면이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점수가 나중에 공문을 통하여 관리자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하게 되는 줄세우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관평가의 첫 번째 문제는 평가지표가 관할 범위가 넓은 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기록연구사 소속된 기관이 관할하는 기관 범위가 클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범위가 넓은 지역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는 지표에 나와 있는 생산현황, 정수점검, 공개재분류, 이관, 폐기 등의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 경우 결국 평가지표는 이러한 관할 범위에 따른 유불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기관평가는 누구를 평가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기관평가의 결과가 좋다면 이는 기록연구사가 업무수행을 잘 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지만, 기관평가의 결과가 나쁘다면 이는 기록연구사가 업무수행을 잘 못 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인식한다. 즉, 기관평가의 결과는 그 기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기관에 소속된 기록연구사의 개인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관평가는 어떤 기관에 있어서 오히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관리자를 비롯한 전 구성원에게 상기시키고,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관평가는 그 기관의 기록관리 환경 조성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부담을 지우는 면이 더 큰 도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관평가는 점수를 맞추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실제로 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록물법과 그 표준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전인장치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화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하다! /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발 표 2.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할까요?

- 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따른 공공기록물법의 문제점 분석

백수령

경상남도교육청

Keywords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교육청, 교육기록물, 기록자치, 아카이브

1.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추진과 공공기록물관리법

2006년 10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설립이 완료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두 곳 뿐이다. 강행규정인 광역자치단체도 설립이 어려운데 교육청 단위에서 설립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다. 투자심사와 동시에 기록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기록원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혀 조례가 철회된 상황이다.

반대의견의 중심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기록물의 중심이 되는 법령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반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따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가치

2006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강행규정으로 넣은 이유에 대한 답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에서 알 수 있다. 제11조 제5항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데 관할 공공기관의 체계적 기록물관리 뿐만 아니라 제5호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은 그 지역의 혹은 그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지역의 혹은 생산한 기관에서 가장 잘 보존·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공공기록물법 제11조 제5항 제5호의 내용처럼 결국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많은 중요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두 수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존 분담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감”의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는 강행규정으로 기록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임의규정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다. 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과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

- 제19조 제3항에서는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모든 기록물을 보존할 수 없기에 순차적 이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30조를 들어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에서도 다시 선별하여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하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것을 “기록관의 요청”으로 볼 것인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우선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후자의 경우로 보면 결국 “기록관”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서거나 동종대량의 문서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는 활용하기 좋으며, 이슈가 되는 기록물만 보존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개선방안

모든 공공기관이 “아카이브”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생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조금 더 많이 설립되어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이관 분담하며, 더 많은 기록물이 잘 관리되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은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마무리를 하며,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은 강행규정에 포함되어 교육자치법과 공공기록물법이 상충되지 않길 바란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절차, 기록물의 성격, 기관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제11조가 변화되길 바란다.

둘째, 기록관에 유해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기록관이든 기록원이든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와 재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역사적 기록물을, “기록관”은 그렇지 않은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록자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기록원 설립 추진 역시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 분담, 후대에 온전히 기록물을 전승하고 우리의 기억을 전달하는 것, 도민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원을 자주 방문하게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기록공동체와 공공기록물법이 교육청 기록원 설립을 응원해주길 바라며 마무리 해본다.

교육현장에서 공공기록물법을 말한다! / 스티브지원쓰와 아이들

발 표 3.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이 가져올 변화

우지원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Keywords

공공기록물법, 4차 산업 혁명,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공공기록정책

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매뉴얼 문제는 없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문제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설명회와 여러 기고 글을 통해 법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정부국 및 관련 기관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법 충돌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정보가 공공기록물법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면 이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을 따라야 함”이라는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에 행정정보데이터세트와 관련된 조항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관리하며,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기준표를 작성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다. 자칫 이번 유권해석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정책 중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시스템의 데이터 폐기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용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 혹은 궁금증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국가기록원 매뉴얼을 살펴보면, 행정시스템의 유형을 확인하고, 기록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외 시 사유를 작성하고 공공기록물법 이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시스템 행정데이터의 삭제는 무단 폐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에 기록관리 방안 적용 시 기록관의 역할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적용 여부가 애매한 시스템은 기록관리 대상 선정을 거부하고 시스템 내용을 잘 모르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 이를 승인하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잘못 분류할 경우는 무단폐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결국 일선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은 권한은 없고 처벌만 받을 수 있다.

둘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에 따른 혼선 매뉴얼에 따르면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의 경우 기능에 따른 단위기능명을 입력한다. 이때 e사람과 같이 복무-급여-인사 등 여러 기능이 있을 경우 단위기능별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며, 보존 기간은 단위기능별로 책정한다. 결국 하나의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폐기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10가지 단위기능이 있고 보존 기간이 9개는 1년, 1개는 영구이면 이 노후화된 시스템은 영원히 폐기 불가이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에 기능별 상이한 보존기간을 가진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일부 데이터를 폐기함에 따라 연계된 보존대상 데이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물론 국가기록원은 2년여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2019년 기준 범정부 EA에 등록된 16,228개의 정보시스템 중 6개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했고 이는 0.03%에 불과하다.

셋째, 국가기록원 인식 문제 국가기록원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 설명회」를 보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방법이 간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선정하고 기록관리기준표만 설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발효에 맞춰 제대로 된 관리 방안보다는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전 기관 공문 발송을 통해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발효를 근거로 대상 선정 없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폐기는 무단폐기로 간주하니 폐기에 주의를 하라는 내용을 알린 뒤, 각종 법령 및 정책, 업무의 중복,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의 불안전함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조금 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기록원에 바란다.

이번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문제와 연계 하여 국가기록원에 바라는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으로 대두되는 데이터 관리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필요성이 있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여러 중앙부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했듯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데이터의 생산부터 보존 및 폐기, 활용에 이르는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제는 기록관 실체가 필요하다.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기록관 실체가 없는 공공기관이 부지기수다. 지금까지는 기록관이라는 유령 조직 속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1명이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를 도맡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 시스템 운영부서와 협의를 하여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선정, 기록관리기준표 제정 등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작게는 팀 단위에서 많게는 국 단위 조직인 시스템 운영부서가 1인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관별 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시스템 운영부서의 공공기록물법 준수 의무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인식개선에는 시일이 걸리는 법이며 결국 이 핑계로 모든 업무를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1인에게 다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기록원도 시스템 운영부서와 제대로 된 협의의 진행이 가능한 기록관 조직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 새로 신설되는 데이터직렬 공무원을 적극 활용 하여 기록과 데이터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물론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목표로 데이터 정책 총괄이 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일선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면 지금과는 양상이 달랐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와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일선 기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들의 열악한 상황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국가 기록관리 총괄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I 한국문헌정보기술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사회 : 이동혁(한국문헌정보기술)

[CONTENTS]

발 표 :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기록 전시 사례	59
/ 오영단(한국문헌정보기술)	
발 표 : 발언 아카이브 구축 사례	60
/ 김화경(한국문헌정보기술)	
발 표 : 온택트(ontact)시대 문화콘텐츠기관 서비스의 흐름과 변화	61
/ 정혜지(한국문헌정보기술)	

질의응답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헌정보기술

발 표 1.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기록물 전시 사례

오영단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선임연구원

Keywords

인터랙티브, 기록물 전시, 미디어월, 아카이브 월

상호작용의 의미를 지닌 인터랙티브는 IT 및 미디어 장치의 발전에 말미암아 콘텐츠 아트, 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분야에서 공간적 제약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람객이 직접 미디어 장치를 터치하거나 행동(모션)함으로써 특별한 전시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시에 있어 인터랙티브 장치는 관람객이 전시와 더불어 전시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인터랙티브 장치는 PC(서버)에 전시용 프로그램(S/W)과 이를 실행하는 터치스크린, 모션센서 부착 빔프로젝터 등의 하드웨어(H/W)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터치가 가능한 멀티비전을 이용하여 전시관의 한 벽면을 채워 이미지 또는 미디어월의 역할을 하는 대형 월이 추세이며, 이러한 형태의 전시를 인터랙티브 월,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도 기록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록물 전시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록물의 전시의 경우 미술, 박물관과는 달리 전시물이 문서철, 문서일 경우 표지 등 일부 페이지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의도된 하나의 컬렉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기록물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 전시를 위해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다면 부분적으로 기록물 전시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시 기록의 컬렉션과 공개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의 인터랙티브 월 등의 해외 전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문헌정보기술(주)에서 최근 제작한 인터랙티브 장치를 활용한 여러 전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헌정보기술

발 표 2.

발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김화경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수석연구원

Keywords

발언 아카이브, 개인 기록, 기록정보 서비스

개인 기록은 대부분 저술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생산한다. 기록에 근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기억에 의존한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왜곡 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개인의 발언 기록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은 기억 의존도가 높은 개인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개인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용이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이 웹에서 SNS, 커뮤니티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발언을 남기거나,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중요 직위자의 경우 그들의 발언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설문 등을 모아 별도의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생산하기도 한다.

개인 발언은 저서, 자서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개인 기록으로서, 인물의 생각과 행적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인물이 사건, 정책, 학문 분야와 같은 특정 주제(subject)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 인물의 발언들을 모아보는 것은 주제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언 아카이브의 첫 모델을 구축 중이며, 향후 분야별 발언 아카이브 및 발언 기록 콘텐츠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발언 아카이브는 발언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유로이 검색·활용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언 아카이브에서는 발언을 기본 단위로, 발언을 위한 메타데이터 체계 및 분류체계를 적용하며 발언과 관련된 정보자원을 연결한다.

본 발표는 발언들을 모으는 도구로서 발언 아카이브의 개념과 구축 목적, 구축 과정 등의 사례를 통해 특정 분야·유형의 기록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록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사례 / 한국문헌정보기술

발 표 3.

온택트(ontact)시대 문화콘텐츠기관 서비스의 흐름과 변화

정혜지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전임연구원

Keywords

아카이브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코로나19, 온택트

아카이브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열람, 전시, 이용자교육, 연구지원 등을 서비스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견학, 행사 등의 방법을 채택해 왔다. 이외에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온라인 열람·검색, 디지털 기록 사본 제공, 온라인 전시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물리적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아카이브 콘텐츠 서비스의 발전 방향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과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새로이 변화된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문화콘텐츠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양상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사례는 아카이빙 대상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참여형 수집 서비스와 온택트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아카이빙 대상으로서 ‘코로나19’를 수집한 사례이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난적 상황에서 개인이 생산, 수집한 기록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 다양한 관점과 유형의 기록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카이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전시 또는 열람하게 함으로써 참여형 콘텐츠로서 활용하도록 했다.

온택트 환경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영상이나 VR(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전시, 인터넷 상에서의 대시민 교육 강화, 온라인 컬렉션 웹사이트 등 검색도구의 적극 활용,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활용 등이 그 사례이다. 자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층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깅 서비스와 같이 산발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한 데 집약해 서비스하려는 사례도 발견했다.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활용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나타났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전시 이외에도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보고, 기록 수집 프로젝트·캠페인 등 이용자와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 서비스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아카이브에서는 주로 기존의 전시 콘텐츠를 웹상으로 옮긴 VR 및 웹·동영상 전시 콘텐츠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아카이브는 기록을 매개로 시민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창작과 저작 활동을 지속하는 문화적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의 생동감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아카이브에 적극 참여해 기록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재생산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유행과 물리적 봉쇄라는 상황 속에서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문화콘텐츠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형태를 분석해 그 변화양상을 정리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 4 회 의 장

시 간	일 정	
10:00 - 12:00	개별세션	
	사 회	서지인(부산지방보훈청)
	발 표 1	국가보훈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검토 (남경호/국가보훈처)
	발 표 2	지자체 기록관의 방향 : 너희는 무얼 하고 사니? (한정은/(가칭)경기도기록관기록관리협의회)
	개 별 토 론	박두현(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철환(대통령기록관)
13:30 - 15:30	개별세션	
	사 회	임광섭(우리소리박물관)
	발 표 1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오명진 / 사단법인 통일의 집)
	발 표 2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발전방향 (이정남 / 토피도(주))
	질 의 응 답	

개별세션

사회 : 서지인(부산지방보훈청)

[CONTENTS]

- 발 표 : 국가보훈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검토 65
/ 남경호(국가보훈처)
- 발 표 : 지자체 기록관의 방향 : 너희는 무얼 하고 사니? 67
/ 한정은((가칭)경기도기록관기록관리협의회)
- 개별토론
/ 박두현(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철환(대통령기록관)

개별세션

발 표 1.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경호, 김은해, 서지인, 강미라, 염효경
국가보훈처 기록관 담당자 협의회

Keywords

기록관리기준표, BRM, 단위과제, 보존기간, 생산통제

1. 국가보훈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 개요

국가보훈처(본부)는 국가기록원의 지원(2020년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³⁾)을 받아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속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도 국가보훈처 기록관 담당자 협의회에서 2020년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10월 말부터 추진중⁴⁾이다.

사업은 크게 ‘현황 및 자료분석’ → ‘업무분석서 및 단위과제비교표 작성’ → ‘개선안 협의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 결과물 시스템 반영’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전담 수행해야 하므로 기록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1인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계기로 국가보훈처는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기록관리 기준을 정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 업무 수행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본부-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소속기관별로 상이한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이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의 성과와 한계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의 생산통제를 위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이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관 내의 무분별한 단위과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은 기록관리 영역(기록관 소관)이 아니어서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사업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를 기록관에서 제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해오던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를 정비하여 현행 직제의 업무현황을 반영한 단위과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기간 재검토 및 주요 기록 유형 등 파악을 통해 중요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기록의 분류·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기준표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기록의 생산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기록의 생산통제에 대한 기록관의 한계를 더욱 절실히 실감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담당자의 무분별한 편철을 막을 수 없다.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를 아무리 잘 정비했어도 업무담당자가 본인이 익숙한 ‘서무일반’ 혹은 ‘업무협조’ 단위과제카드에 모든 기록을 편철하는 것은 막을

3) 과기부, 국토부, 복지부, 보훈처, 법제처, 인사처, 소방청, 권익위의 400여개 부서 단위과제/보존기간 정비(2020.6월~11월)

4) 2020년 국가보훈처 기록물관리 추진계획(2020.3.31.)에 소속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를 과제로 선정하였고, 처본부 기록관리기준표를 정비한 경험을 토대로 소속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를 실시하여 2020.10월~12월까지 완료할 예정

수 없다.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문서편철 시 시스템 내에서 문서 종류/유형별 편철 안내창을 아무리 공지하여도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소기능 이상의 분류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은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익숙한 문제였으나, 대-중-소기능-단위과제로 이어지는 분류체계 자체가 엉망인 문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소기능 단위의 변화는 기관에서 조직개편 및 업무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기적으로 BRM에서 반영/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 최초로 생성된 단위과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BRM 시스템은 변경된 연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현재 사용하는 단위과제에 대한 연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류체계로 기록관리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셋째, 기관 공통 단위과제의 비현행화로 현재와 맞지 않는 단위과제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병역신고’ 업무는 기관 공통 단위과제에 없어서 기관고유로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찾을 수 없어 ‘기간제 인사관리’라는 기관 공통 단위과제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무직·기간제 인사관리’로 사용하였다. 이번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기관 공통 단위과제 현행화를 약속하였는데,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과제이므로 주기적·수시적인 현행화 작업은 필수이다.

3. 기록의 생산통제를 위한 대안 모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기록관리기준표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록의 생산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 기관자가 문서 편철 시 참고할 수 있는 단위과제카드 자동추천 기능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문서의 공문 제목을 분석하여 단위과제 자동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설 TF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처리과는 매년 유사한 수준의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하므로 신설되는 과제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하여 단위과제 자동추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기능분류체계(BRM)를 그대로 사용하되 보다 느슨한 기록의 분류·평가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소기능 또는 중기능(처리과 단위)에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기록 편철의 오류를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 업무담당자가 어떤 단위과제카드에 편철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현행 단위과제에 보존기간 부여가 의미가 있으나,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상위 단위에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기록의 생산통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별도의 분류·평가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보완해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기록분류·평가 체계를 학계·현장·국가기록원이 논의해나가야 한다. 기록관리의 시공간적 제약이 느슨해지는 전자기록 환경 하에서는 보다 단순하고 보편적인 분류체계와 보존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의 현용/준현용 단계와 비현용 단계에서 별도의 분류·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용/준현용 단계는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담당자의 행정참고 목적을 극대화하는 분류·평가 체계를 구현하며, 비현용 단계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본적·공통적으로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목적의 분류·평가 체계⁵⁾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분류·평가 체계로 기록을 수집/보존하기 어렵다. 정기적(매년/분기별) 또는 정치사회적인 변화 등이 발생할 때마다 자체 수집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한다.

개별세션

발 표 2.

지자체 기록관의 방향 : 너희는 무얼 하고 사니? : 경기도, 기록으로 잇다

한정은, 임미숙

(가칭) 경기도 시군기록관 기록관리협의회

Keywords

기록관, 지자체, 협의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경기도 31개 시·군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발표의 주 내용은 각 기관의 전문요원의 생생한 현장자료를 활용하였다. 기관에서 기대만큼 기록물관리의 약진이 어렵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기관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채용되면서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고민을 확장해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구상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통하면서 기록물관리 실무자 모임이 시작되었다. 실무자모임을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시작한 경기도 31개 시·군 기록관의 연대모임을 소개한다. 또한 연말이 되면서 바쁜 업무에도 각 기관에서 기꺼이 기관의 현황과 활동을 정리해서 제공을 해준 자료를 통해, 각 기록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활동과 개별적이고 특수한 활동을 정리하여 지자체 기록관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록관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별로 한 일이 없다며 겸손한 전문요원들의 일상적인 일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을 확인한다. 또 앞으로 확장되는 업무를 위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전문요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역에서의 연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은 총5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 “여럿이 함께”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실무자의 모임의 필요성과 모임의 시작 진행 상황을 정리하였다. 개별 업무활동을 하면서 왜, 어떻게 연대해야하는지 필요성과 방향을 생각해 본다. 2장 “지금 우리 : 경기도 31개 시군기록관 현황”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록관의 현황을 설명한다. 시설과 장비, 전자, 비전자 관리 현황을 소개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3장 “같이 또 따로 : 모아봐 모아봐”에서는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1건~2건 이상을 모아봤다. 기록관리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업무활동 등을 수집하였다. 기관의 상황이나 향후 사업을 기획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4장 “소원을 말해봐”에서는 각 기관에서 기록인의 지위로서 희망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정책 제안 및 연대의 활동 등의 기록인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록으로 잇다” 기록인의 인연은 기록으로 이어져 있음을 상기한다. 편안한 여건은 아니지만 함께 하는 기록인이 있어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부심을 가져본다.

이번 발표는 기록관리 문화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현장에 있는 기록인과 기록관리 연구에 입문한 기록인에게 공감과 정보의 공유마당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많은 기관의 사례를 다루다 보니 깊이 있는 주제에 접근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논의꺼리로 남기고자 한다

개별세션

사회 : 임광섭(우리소리박물관)

[CONTENTS]

- 발 표 :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69
/ 오명진(사단법인 통일의 집)
- 발 표 :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발전방향 71
/ 이정남(토피도(주))

질의응답

개별세션

발 표 1.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오명진

사단법인 통일의 집

Keywords

늦봄, 문익환, 개인 아카이브, 옥중서신, 민주화, 통일운동

1. 발표의 동기와 목적

이 발표는 해마다 열리는 기록관리 유관 개인, 단체들의 가장 큰 행사인 전국기록인대회를 맞아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를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발표를 통해 늦봄 문익환이 남긴 기록의 가치를 알리고 소장기관인 사단법인 통일의 집의 활동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기록관리상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개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민간영역의 소규모 기관의 보람과 난관 그리고 전망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늦봄 문익환의 삶과 기록

수유리에 있는 문익환 통일의 집은 작은 빨간 벽돌집으로 상공부 주택으로 건립되었고 늦봄, 문익환 목사와 가족들이 1970년부터 살던 집이다. 1994년 문익환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박용길은 ‘통일의 집’이라는 현판을 써 붙이고 집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이 집은 문익환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성금으로 복원하여 2018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다.⁶⁾ 통일의 집에는 문익환과 박용길이 생산, 축적해놓은 다량의 근현대사 사료들이 보존되어 있다. 특히 문익환은 목회자, 교수, 시인, 민주화운동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시, 설교, 성명서, 연설문, 학술논문,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기록화된 흔적들을 남겼다. 약, 2만 5,000여점 규모로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자체 소장하고 있는 것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위탁보존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⁷⁾ 대표 사료로 복간도 기독교 독립운동사, 6. 25 전쟁 당시의 편지와 육아일기, 문익환 관련 편지들, 4.2 공동선언문이 있다.

그 중에서 편지는 대표적인 통일의 집의 사료 모음 중의 하나이다. 먼저 문익환이 10년 3개월동안 옥중에서 쓴 편지가 팔백여 통 있고, 부인 박용길 장로가 하루도 빠짐없이 옥중으로 보냈던 “당신께”로 시작되는 삼천여 통의 편지가 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과 주고받은 쓴 편지가 셀 수 없고 기간으로는 1940-50년대 연애시절부터 개인의 일생을 포괄하는 시기에 걸쳐 작성되었다. 특히, 옥중편지는 당국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한 달에 한 편씩 써 내려갔던 주옥같은 글이다.⁸⁾

6) 문익환 통일의집에 붙어 있는 안내문의 내용. 통일의 집 박물관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 운영하는 미등록 사설 박물관으로 서울시 미래유산(2013-098)으로 지정되어 있다.

7) 경향신문. 2018. 5. 27. “절차적 통일보다 우리 마음속 통일 앞서야”

8) 옥중편지에 관해서는 오명진. 2020. 문익환 옥중서신의 특성과 활용. 『기록학연구』, (66), 317-355. 참조

3. 지난 1년간의 활동

작년 가을 통일의 집은 서울기록원이 민간단체 기록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 아카이브랩과 함께 통일의 집의 기록관리 현황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아카이브로서 통일의 집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공유하고 개인의, 주제 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였다. 이는 통일의 집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이 ‘문익환’의 관점에서 경험한 한국사회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주로 민주화, 평화, 통일에 관한 사료들로 전문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통일의 집에서는 소장기록에 대한 박스 수준의 개요 목록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익환 사료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대표 사료인 옥중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약 700여통의 편지 실재를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중대한 보존과 활용상의 문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우선 편지의 노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내용 확인을 위해 원본 사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인이 읽기엔 손글씨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졌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옥중편지에 대한 텍스트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통일의 집에서는 12월 1일 옥중편지를 테마로 하는 온라인 아카이브 런칭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로 이름 짓고 그간 오프라인에 역점을 두었던 통일의 집의 사료 서비스를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서비스가 오프라인 전시나 간행 작업에 초점이 있었다면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원사료 기반의 서비스, 사료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층을 확대하고 대표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사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이용제공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런칭에서는 그간 깨알같은 손글씨로 쓰여진 탓에 읽기 어려웠던 문익환 옥중서신의 내용 전체를 텍스트화하여 제공하면서 편지의 내용분석에 근거한 몇 가지 시범적인 세부 메뉴를 개발하였다.

4.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의 과제와 전망

“아카이브는 우리의 집합적 기억을 위한 공간이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TNA, 2017. 1. 디지털 전략 중에서)

“사단법인 통일의 집은 온 겨레의 염원인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감의 장이다.”

(통일의 집의 비전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왜 문익환을 기억해야 할까. 또,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는 어떤 기록과 서비스를 통해 그를 되살리고 이용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얼마 전 문익환 목사가 첫 감옥생활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한 전주의 MBC가 문익환 목사 특집 다큐를 방영하였다.⁹⁾ 방송은 “시대의 어른”, “위로”, “바보”, “촛불”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금 문익환을 되살리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다. 온라인으로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를 시작하며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잊지 않으려 한다.

9) 전북도민일보. 2020. 10. 25. “전주MBC 특집 다큐멘터리 ‘늦봄 2020’...문익환 목사가 남긴 글에 Vocie AI 기술 접목” 이 다큐는 문익환의 육성기록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인공지능(AI)로 되살렸고 그 목소리가 문익환의 글을 읽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개별세션

발 표 2.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관리 발전방향

이정남
토피도(주)

Keywords

블록체인, 기록관리, 진본성확보, 전자기록, 국가기록원

1. 기록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블록체인의 특징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시스템이라는 분산성과 모든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한다는 투명성, 그리고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는 불변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기록관리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블록체인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국제표준(ISO 15489)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의 관리원칙(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 중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이라는 관리기준을 충족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표는 국내·외 연구 및 적용사례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의 특징이 기록관리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 기록관리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연구 현황

한번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변경 및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록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2~3년을 기점으로 영국 TNA(The National Archives)의 ARCHANGEL 프로젝트 수행, 미국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백서 발간, 캐나다 UBC(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 등 기록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였을 때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ARCHANGEL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에 블록체인 노드를 구성하고 전자기록의 원문에 대한 암호해시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전자기록에 대한 진본검증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보유한 전자기록의 암호해시(SHA256기반 해시)와 비교하여 진본성 및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PoC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청각기록에 대해서는 일반적 암호해시가 아닌 DNN(Deep Neural Network)을 통해 시청각기록의 특징을 TCH(Temporal Content Hash)라는 값으로 추출함으로써 내용이 동일하면 시청각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encoding으로 변환된 파일에 대해서도 진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NARA에서 발간한 백서에 대한 내용과 캐나다 UBC에서 발표한 다양한 논문들의 연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방향성과 의미를 검토해 본다.

3. 국가기록원의 블록체인 적용사례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블록체인과 기록관리를 접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국가기록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가능성과 방향성을 연구하고 검증함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시범사업에서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경남기록원을 블록체인의 노드서버로 참여시켜, 전자문서가 생산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부터 기록에 대한 메타정보와 암호해시(SHA256기반)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저장하는 PoC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진본성과 무결성 정보를 확보하고 실시간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관이나 기록에 대한 재평가 진행상황을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국가기록에 대한 처리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기존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전략에 따라 장기 보존포맷으로 진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스템 부하나 처리시간의 과다소요 문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대용량의 시청각기록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추가 연구하고 PoC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록에 대한 진본성 문제로 전자기록 형태로 열람 및 배부가 어려웠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연구하였으며, 특히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 우편으로 관련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수신하느라 소요시간이 2~3주 걸렸던 업무를 전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국내·외 연구와 적용사례를 통해 기존에 관리기관의 신뢰에 기반하였던 기록관리가 블록체인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객관적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기록관리에 블록체인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기록의 특성이나 관리 목적에 따라 블록체인 참여노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기준과 방향이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10년 20년이 아니라 몇 백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기록관리의 특성상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어떠한 단위로 관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기준과 관리기술도 실 적용과정에서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본 발표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여야 할지를 검토함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5 회 의 장

시 간	일 정	
10:00 - 12:0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사 회	왕호성(국가기록원)
	발 표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현황과 경과(왕호성/국가기록원)
	발 표 2	국가기록원 시범사업 현황과 관리방안(이주광/국가기록원)
	발 표 3	공공기관 적용사례 - 인사처(신정엽/인사처)
	발 표 4	공공기관 적용사례 - 교육부(유재상/교육부)
	종합 토론	사회 : 한능우(국가기록원) 토론 : 임진희(명지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13:30 - 15:30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사 회	한희정(한국국토정보공사)
	발 표 1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정지혜/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발 표 2	문서유형 보존포맷 다양화 연구(양동민/전북대학교)
	발 표 3	장기보존패키지(NEO3) 다양화 연구(남동선/(주)팬소프트)
16:00 - 18:00	토 론	민간 아카이빙 연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백숙희(청주 두껍말기록단), 김영규(철원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사 회	이젬마(국가기록원)
	발 표 1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현재와 미래 (한능우/국가기록원)
	발 표 2	소장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OCR인식 성능 개선방안 연구 (홍정기/국가기록원)
	발 표 3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계학습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 자동분류 적용) (백영미/국가철도공단)
	발 표 4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방안 연구(김진아/국가기록원)
	발 표 5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최광훈/알엠소프트)
	종합 토론	김재평(국가기록원), 임수중(ETRI)

I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사회 : 왕호성(국가기록원)

[CONTENTS]

발 표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현황과 경과	75
/ 왕호성(국가기록원)	
발 표 : 국가기록원 시범사업 현황과 관리방안	77
/ 이주광(국가기록원)	
발 표 : 공공기관 적용사례 - 인사처	79
/ 신정엽(인사처)	
발 표 : 공공기관 적용사례 - 교육부	81
/ 유재상(교육부)	
종합토론	
/ 사회 : 한능우(국가기록원)	
/ 토론 : 임진희(명지대학교), 양동민(전북대학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발 표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현황과 경과

왕호성

국가기록원 디지털기록혁신과

Keywords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1. 기록으로서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2003년 정부는 전자정부로드맵을 발표하여 기존 문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민원, 조달, 국세, 재정, 시군구/교육 행정, 인사관리, 전자결재 문서 등을 데이터세트로 관리하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들을 개발하였다. 같은 시기, 미국 국가기록청이 연방정부 데이터세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AD(Access to Archival Database)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해외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관련 동향이 국내에 알려졌다. 2005년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대상화를 언급하고, 학계에서도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되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국가기록원은 2007년 학계와 협력한 연구용역을 통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개념/절차/방식/소요예산 등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을 설계하였다. 이를 근거로 확보한 예산으로 2009년 최초의 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이하 DAMS)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201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법정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 그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DAMS는 연구용역에서 설계된 방안을 적용하여 국정관리시스템과 2개의 폐지된 과거사위원회 조사시스템 데이터세트 일부를 이관받아 시범 운영되었다. 대상 시스템들의 데이터세트는 RMS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DAMS로 이관된 후, 보존포맷변환/공개재분류/정리기술/평가폐기 등 문서형 기록관리를 위해 설계된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몇 년간의 운영을 통해 담당부서에서는 DAMS에 구현된 기능이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후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단계 시행착오를 딛고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데이터세트 구조분석 및 진본성 보장 기록관리 기능모델 연구, 2015)가 다시 시작되었다. 공공기관 현장조사와 범정부 EA를 분석하여 2016년 현재 약 18,000여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SP/BPR 사업을 거쳐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관리방안이 담긴 새로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안)을 2018년에 마련하였다.

학계에서도 데이터세트를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학계는 전자기록관리의 절차가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 유형에 맞춰져 있어 다종·다수의 데이터세트 기록에는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책이 개선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2017). 국가기록원과 학계의 전환적 데이터세트 연구결과는 전자문

서에 적용되던 이관, 보존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으로는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쉽지 않은 과제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3. 패러다임 전환으로 찾은 관리방안

빠른 속도로 공공기록물이 데이터세트화 됨에 따라 비현용 데이터세트의 삭제 필요성 역시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합법적 폐기 방법 등 데이터세트 관리 방법을 문의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반영된 기존 법령해석으로는 개별성이 강한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2018년 마련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안)은 데이터세트를 이관하지 않고도 기록관리가 가능하다는 전환적 인식을 반영한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세트를 외부 시스템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기록관리를 위한 일체의 권한이 이관된 것으로 보는 ‘자체관리의 허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만 평가·폐기 등의 처분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 기존 기록관리 방법과 상치되는 발상이지만, 지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경험은 자체관리를 허용하지 않고는 데이터세트 관리의 시작뿐만 아니라 포괄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예외적 인식을 갖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9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 구축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보완된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담은 법령이 시행되었고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공표준도 제정되었다. 전환적 발상으로 탄생한 新 데이터세트 관리방법론은 디지털정부로 전환하는 시대적 갈림길에서 기록전문가들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4. 기록전문가의 집단지성으로 보완해 가야

세계 수위의 전자정부를 구축한 대한민국 행정환경의 변화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그 여파로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의 내용이 이에 맞게 진화하면서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된 기록물은 ‘정보’ 또는 ‘데이터’로 치환되어 불리고 있다. 종이기록물 관리에 익숙한 기록관리 실무자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관리대상과의 구분이 모호해진 디지털 실체를 기록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여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각 법률 소관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이 다루는 정보가 기록이라면 공공기록물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2018년 완료된 ITTrust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디지털화로 인해 세계 기록관리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상을 기록전문가의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기록전문가들이 디지털 기록관리에 적극 대응한다면 변화를 주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 IT전문가들이 기록전문가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는 대한민국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는 기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행된 최초의 시도이다. 시작의 부족함이 있겠지만, 공동운명체이자 당사자인 기록전문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ITTrust가 걱정하는 부정적 전망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기록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미래의 기록관리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발 표 2.

국가기록원 시범사업 현황과 관리방안

이주광

국가기록원 디지털기록혁신과

Keywords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행정데이터세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관리기준표, SIARD_KR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시작과 현장의 요청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업무 중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이 가장 시급했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개발을 전담하는 팀을 2019년 초에 구성했다. 기록공동체와 추진했던 다양한 선행연구와 정책연구 영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그간 시스템 운영 현장이나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요구와 다양한 문의들이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운영중인 데이터(과거 문서들과 유사)의 기록관리 대상 여부 판단 요청이었다. 2010년부터 공공기록물법령에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 요청이 많았다. 두 번째 유형은 기관의 정보시스템내 데이터가 중요하여, 기록관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였다. 기록관리 대상인 것은 인지하였으나, 구체적인 기록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침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관의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운영 정지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을 문의하는 사례이다. 혹은 과거 시스템을 폐기하면서 내부 데이터만 백업파일(DB덤프)로 보관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증거자료 요청, 혹은 감사자료 청구 등이 들어온 사례들이 있었다. 중요 데이터세트를 폐기하기 전에 문의한 경우는 다행이나, 이미 삭제한 경우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높았다. 유사한 사례로 한시·폐지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례도 빈번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누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평가나 폐기절차 요청 등 이다. 특히 개인정보 등의 관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현장의 요청들은 해당 데이터세트가 공공행위의 결과로 저장되는 기록물의 가치를 충족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원칙과 관리프로세스를 다양한 유형의 행정시스템 기록관리에 응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했다.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관리기준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 행정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는 데이터의 연속성 보장 등과 같은 유연한 관리 원칙이 엄격한 절차 중심의 공공기록물법령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현장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관리 지원용 도구(삭제지원 도구나 보존도구 등)를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별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적용과 관리도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실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록관리 지침과 함께, 시스템 유형별로 기록관리가 적용된 실행 사례(관리기준표 작성 및 선별-평가심의-삭제-보존)가 참조모델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유형이나, 업무 구분에 따른 다양한 행정시스템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14개 행정시스템에 대해 관리기준표 작성과 기록관리 실행 방안을 적용했고, 2020년에는 연말까지 50여개 행정시스템에 대해 기록관리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200여개 이상의 적용사례를 구현하여 누구나 참조할 수 있는 참조모형 बैं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세트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관리모듈(DBMS)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존이나, 평가·폐기 등의 기록관리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이 시스템에 있거나, 추가로 개발하여 보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단기간에 기능 개선을 실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록관리 실행 도구를 개발하였다. 우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하고, 폐기할 경우 폐기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삭제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삭제지원 도구는 시스템별로 작성한 특정영역을 삭제하는 명령어 구문(SQL)을 등록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특정영역을 삭제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남길 수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등과 별개로 특정 데이터세트(테이블 단위)와 첨부된 파일들을 보존용 포맷으로 추출하는 보존도구를 개발하였다. 보존도구는 스위스연방기록원이 최초개발한 SIARD(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al Databases)를 분석하고, 추가 기능을 보강하여 SIARD_KR로 고도화하였다. 이 도구들은 한글화와 단일 파일 형태의 패키징화를 통해 배포용 버전으로 매뉴얼과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3.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기록인 대회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실행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필요한 관리용 도구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공동체가 그동안 깊게 고민하던 과제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는 기록물 정의를 공공기록물법령에 반영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다양한 기록공동체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와 방법론들이 계속 발전하는 디지털기록관리의 핵심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매우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님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방대하고 다양하며 또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현장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이러한 시도와 도전일 것이다. 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으로 발전시킨다면 복잡하고 다변화된 행정시스템의 데이터세트에도 투명한 공공기록관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발 표 3.

공공기관 적용사례 - 인사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행정정보데이터 기록관리 사례

신청업

인사혁신처

Keywords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기록관리기준표, 인사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이하 e-사람) e-사람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중앙 부처의 인사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직원과 인사담당자들이 일상적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인사업무지원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에 각종 현황,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2001년 9월에 구축, 7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업무담당자들이 평균 2.56시간을 사용하는 핵심 업무시스템으로 68만명의 인사, 급여, 복무, 성과 등 인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구축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e-사람 데이터의 이관과 폐기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한시 정부조직에 대한 이관문제가 불거졌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폐지된 경우, 인사, 복무정보 등 인사데이터의 소유권한을 가진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력증명서 발급, 소송자료 제출 등을 위한 데이터 접근,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정보화부서에서 e-사람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 플랫폼을 운용, 관리할 뿐 데이터의 생산·접근·사용 권한은 없다. 일반적인 종이기록물은 정부부처가 폐지되어 인계받는 기관이 없을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있지만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이관 절차,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이관 문제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이었다. 다음은 데이터의 폐기 문제이다.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복무 승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가정통신문, 병원진단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스캔 파일 용량이 1-2MB 정도로 동종의 대량파일이 첨부되고 누적되면서 저장 공간 부족, 시스템 부하 등 장애를 초래하였다.

e-사람의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정보화부서, 인사제도부서, 국가기록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e-사람은 인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본은 인사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업무의 기능, 절차와 규정, 관련 데이터 중요성 등은 임용·복무·성과 등의 제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이므로 관련 제도부서의 의견제시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정보화부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데이터의 저장, 연계 등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정보화부서의 협조 없이는 기록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화부서의 주요 역할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 데이터 관리단위(단위기능)의 구분, 연계데이터 확인, 이관·폐기를 위한 기능 탑재 등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다수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고유시스템인지 파악하여 공통시스템일 경우 데이터 소유와 관리 권한의

문제(e-사람 데이터의 소유권한은 각 기관에, 시스템 운용 관리 권한은 인사혁신처에 있음), 이관·폐기 방식 결정 등에 대해 타 기관과의 공유, 협조도 필요하다.

기록관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e-사람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기능의 범위와 보존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관·폐기 등 기록관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며, 이관·폐기 과정의 기록화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관·폐기 등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면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이관·폐기 모듈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기록관,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e-사람의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관련 법령 조사와 시스템 분석이다. e-사람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법령, 표준, 지침을 수집하고 기록관리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다. 인사업무의 단위기능 설정하고 업무절차를 파악하며, 업무 경중 및 보존기간 설정 등에 참고가 된다. 시스템 분석은 정보화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ERD, 테이블명세서, 기능명세서, 사용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의 구조, DBMS 정보, 데이터 저장, 암호·연계 등의 정보를 산출한다. 둘째, 단위기능의 설정으로 기록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기록관, 정보화부서, 인사제도부서가 협력하여 단위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e-사람의 경우 크게 인사, 복무, 급여, 평정으로 단위기능을 나누었다. 인사기능 아래에는 인사기록, 임용, 보직, 호봉, 승진, 평정, 교육훈련, 채용, 조직, 징계, 상훈 등 세부 단위업무로 구분되는데, 단위기능을 세부적인 단위업무로 내려가면 갈수록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포괄성과 구체성 사이의 적정 범위로 단위기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기능을 설정하면서 기록 대상에 제외되어야 할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 게시판, 공지사항 등의 데이터를 기록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위기능별 기록관리정보를 파악한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한과 관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접근권한, 공개구분,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적용 범위, 적용 대상 테이블 정보, 처분 제약 사항(처분 예외 사유),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존기간은 기존의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와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인사, 복무, 급여, 평정업무는 전 기관에서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복무(초과근무)-급여(초과근무수당)’와 같이 연계 데이터가 있을 경우, 처분 예외 사유를 명시하여 원래 보존기간에서 추가로 비치 보존할 수 있도록 비치 연한을 설정하였다. 폐기와 같은 처분행위는 각 기관에서 실시되므로 보존기간 설정에 있어 기관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때는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기준으로 삼고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행정정보데이터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계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두지 않으면 폐기에 따른 다른 데이터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e-사람 데이터의 이관은 폐지 부처에서 대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SIARD-KR 모듈을 사용해 첨부파일을 포함한 테이블단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 후 경력증명서 발급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조치로 증명서 서식 형태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부기정정과 같은 데이터 수정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e-사람 기록관리 작업은 기록관, 정보화부서, 인사제도부서, 국가기록원이 협력하여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단위기능별 기록관리 방안을 도출한 의미 있는 사업이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제도적, 실행적 기록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확산과 개선을 통해 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 국가기록원

발 표 4.

공공기관 적용사례 - 교육부

: 교육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사례

유재상

교육부(現 국가기록원 파견)

Keywords

교육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1. 교육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 작성 사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보기술이 확대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와 유형에 담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 중 하나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주요정보를 관리하거나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기관별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몇백개에 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다르게 국가 기록관리 정책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정보를 보존·활용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에 이에 맞는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정책이 필요하였다.

국가기록원 주도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는 관리기준표 작성을 위해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 구조에 맞는 정보별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평가·폐기를 실행 가능하도록 한 유연한 방법이다.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 사례를 설명하면 우선 시범운영을 위해 본부 도서관시스템과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시스템 3개(전자자료관,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관리시스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총 4개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시스템의 보유 데이터 정보, 테이블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및 폐기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를 결정하였다. 평가 정보의 단위가 결정되면 관련 정보의 보존가치를 분석하여 보존기간을 도출하였다. 그렇게 분석하여 완성된 각 시스템별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 및 관련 법률 정보, 시스템 개요, 데이터 구조, 업무정보, 기록관리 정보, 부가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본 사례 발표에서는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디지털도서관시스템 선정 이후 기관 및 법령, 시스템 개요, 업무 정보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전달하였고, 국가기록원에서 교육부를 방문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구조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 정보의 세부적인 기록대상단위기능을 도출하고, 해당 단위기능별 목적, 데이터 소유권한, 정보공개, 보존기간 및 책정사유, 처분방법 등을 작성하였다. 주요 기능은 소장 자료 통합 검색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이고 대표데이터로는 서지, 소장 정보, 도서대출반납, 수서관리 등이 있고 비정형 자료는 원문파일(PDF, DOC 등)과 첨부파일(PDF, GIF 등)로 구성되어 WAS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이다. 해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록관리정보로는 도서관(서지, 소장)만 기록관리 대상으로 준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책정하였다. 해당 내용을 관리기준표로 만들어 국가기록원과 최종 협의 완료한 결과 교육부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의 기록관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해당 과정을 거쳐 만든 소속기관의 시스템 역시 관리기준표를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관리기준표의 운영 체계가 아직은

부재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시스템 담당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리기준표의 운영 체계란 기록관에서 각 시스템별 관리기준표를 관리하고 시스템 담당자는 관리기준표를 쉽게 접근하고 평가(폐기) 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기존의 기록관리 체계는 기록을 직접 인계·인수받아 관리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평가의견을 조회하는 방식이었다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관리기준표를 파일로만 보관하는 형태이고, 시스템은 여전히 담당자가 관리하다 데이터 폐기를 위하여 담당자가 기록관에 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인데 현 체계와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명확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시스템 담당자가 관리기준표를 함께 작성하였다면 기록관리 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나, 담당자 변경 시에 시스템의 기록관리 체계를 모르거나, 해당 절차(평가 요청)를 생략하고 정보(데이터)를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사례 발표 이후 이와 같은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기록원과 현장의 기록관에서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 전북대학교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사회 : 한희정(한국국토정보공사)

[CONTENTS]

발 표 :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	84
/ 정지혜(전북대학교), 오효정(전북대학교)	
발 표 : 문서유형 보존포맷 다양화 연구	86
/ 양동민(전북대학교)	
발 표 : 장기보존패키지(NEO3) 다양화 연구	88
/ 남동선((주)팬소프트)	
질의응답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발 표 1.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¹⁰⁾

정지혜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오효정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과 부교수

Keywords

코로나19, 기록관리, 뉴스미디어, 이슈 분석, 개인정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상황에 놓여있다. ‘팬데믹’이란 용어는 2009년 ‘신종플루’라는 감염병을 통해 처음 대두되었다가, 이후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재언급되었고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제 사람들은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등, 매일같이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해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 정부의 대응 결과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사건을 기억하고 업무의 투명성 감시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나아가 보존된 기록은 또다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된 경우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미디어, 특히 뉴스에 나타난 기록관리 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바이러스 뉴노멀 시대에서 기록의 역할과 기록관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수집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으며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코로나’와 ‘기록관리’ 관련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기사를 수집한 후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 기간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최근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수집 결과, 전체 3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나 실제 기사 내용을 전수 검토하고 주제 관련성이 적은 기사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54개 언론사에서 발생한 189건의 기사들을 선별하였다. 해당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전체 기사가 1,067,063건에 달한 점에 비하면 기록관리 관련 보도는 189건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과 미디어의 관심 자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간별 주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을 넘어 ‘주의’ 단계로 넘어간 1월 말부터 해운·항만 업계의 ‘출입기록 관리’에 관한 보도로 시작하여 5월은 ‘증평마을 아카이빙’ 관련

10)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099507)

보도와 함께 ‘증평’, ‘청주’, ‘함평’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각 지역에서 진행한 기념식, 업무협약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고, 6월은 ‘기록의 날’ 법정 기념일의 첫 행사와 관련한 보도가 가장 많았다. 8, 9월은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의 차단을 위한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기대장’, ‘QR코드’, ‘통화 발신방식 방문자 기록·관리서비스’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10월은 ‘함평군’ 기록관 개관과 관련한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기록관리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 역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기록물관리에 대한 내용 보다는 기록관리 분야의 행사 관련 보도가 다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방증한다.

한편, 수집된 뉴스 내 코로나19관련 기록관리 이슈를 그룹핑 해 본 결과, 지역별 행사 이벤트 외의 이슈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출입기록관련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도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3월에는 ‘출입기록’ 관련 보도와 함께 확진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성과 관련하여,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변에 피해를 줘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¹¹⁾. 또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보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제2, 제3의 범죄¹²⁾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코로나19 사태에 기록관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자와의 접촉여부 확인 및 접촉 공간 방역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세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건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확진자 동선 파악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등은 사회적 편익과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첨단 기술로 수집, 통제된 개인정보를 국가 등이 최초 수집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이나 건물출입기록, 확진자 동선 등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후 관리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상기하고 이러한 정보의 유출,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 등 철저한 조치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록관리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에 대한 선별적 수집과 철저한 관리, 마지막으로 완전한 폐기까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 동아사이언스(2020.05.20.). “한국인들 코로나19 감염되면 건강보다 주변 비난을 더 걱정”,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6851>

12) 중앙일보(2020.0924.). “손님인 척 식당 출입명부 ‘찰칵’ 개인정보 노린 20대남”,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973>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발 표 2.

문서유형 보존포맷 다양화 연구¹³⁾

양동민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

윤성호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김지호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Keywords

보존포맷, 문서보존포맷, 텍스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1. 문서보존포맷의 한계

국가기록원은 2004년 『전자기록물 영구보존 기반기술 연구』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보존포맷으로 PDF/A-1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텍스트 유형(아래아 한글, MS 워드 등) 중심의 전자문서가 생산된 시점에 가지고 있던 내용과 구조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재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 생산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전자문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이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문서 유형에만 특화되어 있는 문서보존포맷(PDF/A-1)은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 어렵다.

그리고, 문서 유형도 기존의 텍스트 유형(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유형 등 다양해 지고 있지만, 단일한 문서보존포맷(PDF/A-1)으로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부 문서 유형에는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서보존포맷도 문서 유형에 국한된 명칭에서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으로 확장된 명칭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문서보존포맷’이라는 명칭에서 ‘문서’를 제외하고 ‘보존포맷’으로 사용한다.

2. 문서유형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연구

보존포맷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파일포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를 활용하는 분야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정 파일포맷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파일포맷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해당 파일은 파일포맷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원리로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저장·구동된다. 반면, 전자기록물 유형에 따라 보존 및 표현하고자 하는 ‘고유한’ 내용·맥락·구조·기능·외관을 가지고 있다.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는 공통 특성과 고유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공통 기준은 2019년 『데이터세트 유형

13)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099507). 본 연구는 “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기술 연구』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문서 유형(텍스트 유형, 스프레드시트 유형, 프리젠테이션 유형)의 고유 특성 분석을 토대로 고유 기준 항목들을 도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반으로 고유 기준 항목들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고유 기준 기반 평가체계를 제안한다.

디지털 기록의 활용과 디지털 장기보존 / 전북대학교

발 표 3.

장기보존패키지(NEO3) 다양화 연구¹⁴⁾

남동선

(주)팰소프트 대표이사, ISO TC171 국내위원회 위원장

양동민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

Keywords

장기보존패키지, 장기보존포맷, OAIS 참조모형, 정보패키지, 논리적 장기보존패키지

1. 장기보존패키지의 유형

본고에서 장기보존패키지는 장기보존포맷 또는 NEO 2.0이라고 불리어온 규격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보존포맷은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저장하는 파일 포맷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말할 수 있다. ‘장기보존패키지’는 파일 포맷이라는 저장 형식에 대한 물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관점보다는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정보를 묶는다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칭이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에는 전자기록물은 그 특성상 변형, 훼손, 유실되기 쉬우므로 보다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장기보존을 위한 포맷 규격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메타데이터와 원본 기록물을 Base64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생성하는 방식(NEO2, Version 2 VEO 등)과 메타데이터 및 원본 기록물 등 관련 정보를 폴더나 디렉터리 구조로 논리적 패키지로 생성하고 이를 압축 등 기술을 활용하여 패키지 파일로 저장하여 보존 하는 디렉터리로 구조화된 장기보존 형식(NEO3, Version 3 VEO 등)이 존재한다. NEO2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으로 국가기록원 공공 표준(NAK 31-1: 2020(v2.2))으로 2020년 10월 개정되었으며, Version 2 VEO는 호주 빅토리아 주 공공 기록 표준(PROS 99/007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Standard) 내에 포함되어 있다. NEO3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으로 국가기록원 공공 표준(NAK 31-2 2020(v1.0))으로 2020년 10월 신규 제정되었으며, Version 3 VEO는 호주 빅토리아 주 공공 기록 표준(PROS 19/05 S4: CONSTRUCTING VEOs) 내에 포함되어 있다

2. OAIS 정보패키지 모델 기반의 장기보존패키지 포맷 연구

OAIS 참조모델(ISO 14721:2012) 표준에서는 전자기록물에 대해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 가지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S(ubmission)IP, A(rchive)IP 그리고

14)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099507). 본 연구는 “2019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D(issemination)IP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OAIS 참조모델의 정보패키지를 NEO3 장기보존패키지 표준 규격 개발을 위한 참조 모델로 하여 파일 포맷으로 생산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장기보존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기존 NEO2 장기보존포맷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ISO 15489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록의 4대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상태에서 유지 할 수 있는 패키지 포맷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NEO3 디렉터리 구조의 장기보존패키지 표준 규격을 마련하였으며, W3C XML 스키마 표준을 이용하여 장기보존패키지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였으며, Hash 및 전자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등 진본성, 무결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I 국가기록원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사회 : 이젼마(국가기록원)

[CONTENTS]

발 표 :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현재와 미래	91
/ 한능우(국가기록원)	
발 표 : 소장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OCR인식 성능 개선방안 연구 ...	93
/ 홍정기(국가기록원)	
발 표 :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계학습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 자동분류 적용)	95
/ 백영미(국가철도공단)	
발 표 :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방안 연구	97
/ 김진아(국가기록원)	
발 표 :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99
/ 최광훈(알엠소프트)	
종합토론	
/ 김재평(국가기록원), 임수중(ETRI)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발 표 1.

지능형 전자기록관리체계 현재와 미래

한능우
국가기록원

Keywords

기록관리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

1. 개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있다. 기록관리 분야도 전자기록이 중심이 되면서 자동화, 지능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전자기록의 양을 살펴보면 374만건(2017년), 504만건(2018년), 599만건(2019년)으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록의 유형이 출현하고 있지만 기록관리의 영역에서 이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유형 중 웹기록은 초기 수집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시청각 기록물도 관리가 쉽지 않아 특화기커 다루고 있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이제 관리의 첫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SNS 등의 기록은 방치되거나 전혀 관리방안을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집, 분류, 평가, 활용의 기록관리 전 과정에서 자동/지능화의 적용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다양한 적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지능화 추진시 고려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적용사례

기록관리 분야에서 적용사례는 연구단계와 업무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업무단계 적용 사례로는 분류자동화, 배부자동화, 지능형 검색 등이 있다. 연구단계 사례로는 OCR인식, 개인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공개재분류, 시청각 업스케일링, 시청각 인물 분석 등이 진행되고 있다.

3. 향후 연구 분야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기록관리분야의 지능화와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분야이다. 통계관리 및 기준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여 공개재분류 및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을 추출하고 폐기대상 자동알림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이다.

둘째, 전자기록 검수 자동화 연구이다. 인수 메타데이터 검증 및 오류 추적, 첨부파일의 손상과 변형을 체크하여 검수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보존 및 공개정책의 적용이다. 법령 등에서 보존기간 및 비공개 대상을 자동 추출하고 보존기간 재평가 및 공개 재분류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기록물 내용분석이다. 대용량 기록물의 텍스트를 추출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문 서비스나 맞춤형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능화 적용시 고려사항

지능화 적용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관점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컴퓨팅파워,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과 컴퓨팅파워는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에 속한다. 부족한 데이터 때문에 학습 데이터구축이 모든 분야에서 지능화의 사전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데이터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기록을 데이터의 생산과 보관,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관리가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는 한마디로 규격화와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문서 포맷의 국제표준화, 이관 단계의 데이터 품질보증, 보존단계의 데이터 정합성과 활용단계의 유연성 등이 데이터의 이슈들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시작은 데이터의 기록화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데이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직렬군은 기록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영역별로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 기술로는 자연어 처리와 Computer Vision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서비스 보다는 업무생산성 향상과제를 먼저 고려한다. 대국민 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완성을 필요로 한다. 내무 업무 중 단순 반복작업을 RPA로 연계하고 대량처리 작업의 자동화를 우선 고려한 후 서비스는 차후에 고려하는 순차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빠른 실패와 작은 성공의 확산이 필요하다. 작은 모듈에서 지능화 모델을 빨리 만들어 적용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규모와 분야를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통 데이터세트를 만든 후 이를 활용하여 성공의 경험과 학습효과를 누적시키면서 데이터의 진화를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AI 리터러시의 확보이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듯이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에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전직원의 AI교육, 사례공유, 실제 업무적용, 최신 기술의 모니터링 등 AI의 일상화를 공유할 때 기록관리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발 표 2.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적용방안

홍정기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Keywords

디지털화 기록, OCR, 문자인식, 인식률, 활용

1. 추진배경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디지털화 기록은 TIFF, JPG 등 이미지 형식으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원문의 텍스트 검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하 OCR) 기술이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소장 기록에 적용했을 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냐의 문제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디지털화 확대 및 활용 강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을 위한 OCR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OCR 기술 적용 사례와 함께 국가기록원이 디지털화 기록에 OCR 기술을 적용하기 전 수행한 사전 테스트 결과, 인식성능 개선 등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적용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국내·외 디지털화 기록의 OCR 적용 사례

유럽 연합에서는 영구 보존문서 인식 및 강화(Recognition and Enrichment Archival Documents, 이하 REA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Transkribus라는 필기 기록의 문자인식 플랫폼을 개발하여 아카이브, 도서관, 인문학자들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TNA는 유언장(PROB 11)을 대상으로 필기체 텍스트 인식(HTR)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에 사는 Greifswald 대학, Wismar 아카이브, READ 프로젝트팀 등이 협력하여 법원기록의 디지털화와 필기체 인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자인식 플랫폼으로 READ 프로젝트의 Transkribus를 활용하고 있다.

NARA는 「내셔널 아카이브즈 카탈로그」에 OCR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검색을 개선하고 이미지의 일부 텍스트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구글에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오픈소스인 Tesseract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사례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1995년부터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디지털화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50억원 규모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절차 내에 상용 OCR 솔루션을 적용한 텍스트 추출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1998년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0억원 규모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텍스트 및 음성 서비스 구현을 위해 웹 기반 OCR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업무 자동화 분야의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며 OCR 인식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다양한

카카오서비스를 위하여 핵심기술 중 하나로 이미지내 글자의 자동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다.

ICDAR은 국제 패턴인식협회(IAPR)에서 시작한 국제 경진대회로 OCR 분야의 경진대회 중 권위가 높은 대회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챌린지가 진행되는데, 기록의 문자인식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기준선 탐지, 2020년에는 문서의 시각적 질문 응답 등의 대회가 진행되었다.

3. 소장기록 OCR 솔루션 적용 테스트 결과

국가기록원은 2019년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OCR 솔루션 적용 테스트를 추진하였고, 디지털화 기록 25권(62면)에 대해 상용 OCR 솔루션을 적용하고, 기록 방식, 기록 언어, 기록 유형, 스캔 품질 등 다양한 인자가 OCR 인식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테스트 결과, 출력된 기록의 OCR 인식률은 80~9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타자와 필기 기록은 상용 솔루션 적용 시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한글 타자 기록의 인식성능 개선 연구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한글, 영어, 한자 등 기록 언어별 인식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러 언어가 혼재된 경우 인식률이 저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글자로 이루어진 문서는 80% 이상의 인식률이 확인되었으나, 표 형식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필기로 작성된 경우는 인식률이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사례에서와 같이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상용 OCR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실제 디지털화 기록의 이미지 파일에 OCR 솔루션을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인식률은 주로 출력, 타자, 수기 등 기록 방식에 영향 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장기록 OCR 인식성능 개선 연구 및 OCR 시범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기나 타자로 작성된 기록의 경우 상용 OCR 솔루션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 문자인식 성능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사업(R&D)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서 2020년에는 타자 기록 인식 성능 개선을 위해 타자 기록 10만 단어, 2,000장 규모의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로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상용 솔루션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에는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인쇄체 기록의 디지털화와 함께 10만면 규모의 디지털화 기록에 OCR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5. 맺음말

국가기록원은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록의 내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OCR 기술 관련 사례 조사와 기초적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용 대비 효과적인 OCR 기술의 적용을 고려하여 자동 인식이 가능한 유형과 불가능한 유형의 기록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자 한다.

자동 인식이 가능한 유형의 기록은 OCR 솔루션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동 인식이 불가능한 유형의 기록은 OCR 인식성능 개선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 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위한 문자인식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장 기록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연계하며, 향후, 기록의 개인정보 등 자동 태깅과 마스킹 기능의 연계 활용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발 표 3.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계학습을 통한 이관대상 기록물 자동분류 적용)

백영미

국가철도공단

Keywords

전자기록물, 이관, 기계학습, 인공지능, AI

1. 전자기록물 이관, 이대로 괜찮은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의 기록물은 1년 이내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게 되어있다. 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생산시스템에 전자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기관들은 전자기록물 이관을 시도하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자동이관은 최근 몇몇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일뿐이며, 대부분은 몇 년간 누적된 기록물들을 용역사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관을 하는 편이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의문, 과연 전자기록물 이관은 지금 같은 형태로 생산시스템에서 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만 하는데 그쳐야 할까? 과거년도 생산기록물의 분류가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기록관에서 재분류를 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자기록물 이관을 시행했던 기관들은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물을 구전자문서로 묶어서 이관하는데 그쳤다. 과연, 그렇게 이관을 했을 때, 기관 내 이용자들은 기록물의 검색활용이 편리할까?

이 사례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소속된 국가철도공단은 2019년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기록관리의 도구로 SVM (Support Vector Machine) 기계학습 엔진을 활용하였다. 약 3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기록물분류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데이터를 축적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된 기계학습기능을 통해 이관되는 기록물의 오분류가 줄어들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2. 전자기록물 이관의 전제조건, 조직전거의 정비와 분류기준

공단의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자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요구사항은 과거년도 기록물에 대한 편리한 검색이었다. 전자생산시스템에서 년도가 바뀌거나 조직 변경이 발생할 때 제대로 된 기록물의 정리와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제부서’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들이 십년넘게 쌓여있었다보니 해당업무와 관련된 키워드나 기안자로 검색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공단은 이러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신전자문서로 생산된 기록물들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고려대상은 바로 조직전거의 정비였다. 의외로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사부에서는 조직이력의 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정보로는 정확한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정비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파악하여, 새롭게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사업 초기에는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들을 분류하여 이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실제 2020년에 적용되는 학습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머지 십 사년치의 기록물에 적용하자 미분류로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많아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기에 이르렀다.

3. 전자기록물 이관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적용 사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생각보다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계학습을 위해 정제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 고민 끝에 공단에서는 과거년도 각각의 분류체계를 다시 만들고, 조직이력을 역순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재의 분류기준과 같이 세밀하지는 않더라도 고유업무에 대한 분류기준은 정하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시범적으로 2019년 생산된 기록물인 57만건 중 2/3 분량인 38만건을 대상으로 자동분류기를 적용해본 결과, 자동분류기의 신뢰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록물은 약 2만 6천건으로 약 7%의 오분류율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제 기록물분류 모니터링의 최종 목표값이 오분류율 5%미만 이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고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학습데이터의 검수는 1차년도 학습데이터 샘플링 검사로 예정된 10%정도가 아닌 2/3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검수량이었기 때문에, 향후 과거년도 적용 시 점차 오분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기록물분류의 정합성 검증은 향후 데이터 보정을 통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이용자들이 조직과 업무분류에 맞는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서비스 될 예정이다. 공단은 수년간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오분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엔진을 도입하여 생산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전자기록물 이관 시 반영하였다. 법에서 정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기관의 이용자의 ‘검색·활용’에 집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자기록물 이관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이관사업의 결과로 기록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기능의 유의미한 결과 값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발 표 4.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 방안 연구

김진아
국가기록원

Keywords

전자기록, 공개재분류, 비공개정보, 필터링, 마스킹, 기계학습

1.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위한 비공개정보 필터링 및 마스킹 적용 방안 연구

대량의 전자기록물이 생산되고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기록관리 프로세스별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 공개재분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록원의 그 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비공개정보대상에 대한 필터링 및 마스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007년 이후 축적된 국가기록원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중심으로 비공개정보대상에 대한 유형 및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정보대상(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중심)의 패턴을 추출 기계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마련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비공개정보대상 유형 분석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약 10년간의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중심으로 추출을 하여 주요 비공개정보 대상을 정리하였고, 이를 유형화하고, 학습모델을 제작하여 기계학습에 적용해 보았다.

또한 사례 조사를 위하여 상용 개인정보 탐지 S/W의 탐지항목 등의 현황 및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기관 중 개인정보 S/W를 이용하는 기관의 사례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계학습 수행을 위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체제와 학습에 대한 결과 값을 저장할 수 있는 DBMS, 다양한 기록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문서필터, 그리고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학습기와 분석기를 설치하여 학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운용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기/분석 학습을 위해서는 텍스트 변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문서보존포맷인 PDF를 대상으로 변환을 하였으나 정합성 등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연구를 위해서는 학습데이터가 중요하고 왜곡되지 않는 학습데이터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문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99.2%의 텍스트 변환 정확율을 확인하였다.

기계학습을 위해서, 분석된 비공개정보대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 방안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학습모델인 Kober¹⁵⁾를 사용하여 인명 추출을 적용하였다. 공개재분류 기준서 등에서 분석된 비공개정보

단어 등은 패턴의 일부와 단어사전을 활용하였고, 주소의 경우 패턴과 주소DB를 결합하여 검출하였다. 개인 정보 중 일정 숫자와 패턴으로 구성된 이메일,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규식 패턴 방식을 사용하여 모델로 활용하였다. 총 44,832개의 원문 파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중 약 6%에 해당하는 2,730개에 대한 샘플링 육안검수를 한 결과 정규표현식은 정확도(Recall, 재현율 기준)는 100%, 주소DB는 97%, 인명 기계학습은 70%로 나타나, 평균 97.5%의 정확도(Recall, 재현율 기준)를 보였다.

비공개정보 유형에 따른 분류의 정확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정규식, 단어사전 등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물에 대한 마스킹을 위해서는, PDF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습기/분석기의 최종 분류 DB를 활용하여 해당 비공개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 보았다.

비공개정보 필터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분석과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형태는 비공개이나 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의 예외처리나 정확도가 낮은 인명 및 주소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마스킹 처리 구현도 추가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자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한 대량 기록물 대상 공개재분류의 효율적 방안을 찾고, 국가기록원의 지능형 전자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현장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록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5) Google에서 발표한 BERT 알고리즘 기반으로 BERT+CRF 기반의 한국어 NER Target을 활용한 Kobert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기본 구분 태그는 인명을 포함하여 10개로 구성

지능형 기록관리 추진방향 및 사례 / 국가기록원

발 표 5.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및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도구 개발

최광훈
알엠소프트

Keywords

지능화기술, 법률정보, 의사결정지원도구

1.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자동화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기대

인공지능 기술이 범용화 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의료진단 관련 기술 자료를 조합해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처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듀플렉스는 자연어기술 처리를 활용해 사람대신 기계가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이나 음식점 등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분야 또한 지능화 된 서비스 모델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특정분야 사건의 판결문을 학습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거나 특정범죄 형사 사건에서 유죄 여부와 형량을 예측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국회도서관에서는 ETRI의 엑소브레인 엔진을 활용해 법률 질의응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분야 또한 기록관리 업무에 할당된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특정 기록관리 업무영역을 대상으로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동분류, 자동배부 기술은 SVM 기반의 분류자동화 도구로 생산단계에서의 오분류를 1차적으로 자동검사하여 보정함으로써 기록관 단계에서의 기록물 재분류 업무를 비약적으로 감축하는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온 기록관리 기업들은 공개재분류 자동화 솔루션, 평가대상 기록물 자동 추출 도구 등 기록관리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다.

2. 법률정보 학습데이터 구축 단계

법률정보 분야는 국내 AI 데이터 구축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AI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할 법령, 조문, 판례 등 기초 법률정보 데이터를 AI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또한 올해부터 내부업무 임직원의 업무지원과 함께 대국민서비스에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뉴딜 사업정책의 도움을 받아 AI 학습용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서비스가 필요한데, 공정위의 경우 사건의 쟁점을 기계가 이해하여 사건의 행위사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 담당 심사관의 최종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유사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 구성 변수에

대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제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1차적으로 법령과 고시 등 기준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축적한 공정위가 다루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한 검토서, 의결서, 심사보고서, 판결문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고, 주요한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태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 위반 유형별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처리 작업을 위해, 사건자료에 대한 문장의 구조화 정리와 최대한 규격화 된 사건 별 요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후에는 사건 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메타데이터 항목과 입력 기준을 정의하여 추가로 태깅하고, 1차적으로 구축한 문서 구조화를 한 단계 더 깊이 세분화함으로써 학습모델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수 있는 원천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3. 학습데이터 구축 시 유의사항

학습데이터는 학습대상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학습데이터 구축 작업은 [학습데이터 항목(features) 정의 및 입출력 항목 설정], [적용 알고리즘 선정 및 학습 모델 설계], [학습 데이터 구축]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데이터는 입력과 출력 세트로 구성이 되며, 이 데이터가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계속적으로 학습된다. 따라서 1단계는 목표 서비스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학습데이터 항목값을 모두 펼쳐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입력값과 출력값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학습 모델을 다양하게 구성해보면서, 구성된 모델이 목표 서비스에서 바라는 결과값에 어느정도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원하는 목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적용 알고리즘을 선정해야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①고전적인 기계학습(SVM(Support vector machine) 외) ②딥러닝(deeplearning) ③그 외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전이학습에 기반한 언어모델 bert 외)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때문에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목표 서비스의 운영환경과 적용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요구 자원 등을 고려하여 적용 알고리즘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능형 서비스의 최종 형상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 간 결합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최종적인 모습의 지능형 서비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하나 이상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설정해야 하며 각 단계별 구현되는 서비스별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야 한다. 다음 절차로 학습속련도에 따라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설계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영역이다. 최대한 많은 접근방법들을 찾아 시험해보고 그 결과값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진행하여 입력값을 계속해서 보정해 나가면서 학습 모델을 찾아 나가게 된다. 이렇게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3단계로 본격적인 학습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 최종 목표로 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연차별 순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연차별 완성 결과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실무 서비스 형상을 개발하여 적용하면서,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실행 방향이 효율적인 지능형 서비스 개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20년 11월 19일 발행

편 집 : 박효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 행 :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연락처 : (우)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5길 25, 203호

Tel. 02-747-7268

기록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가 그룹



아카이브웍스는 임직원 대부분이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록관리 연구/컨설팅, 기록관리 솔루션,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입니다.



Consulting

기록관리전문가들이
고객의 Needs를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Archiving

기록 수집, 정리, DB 구축 등
기록관리 A부터 Z까지
전 과정의 사업을 합니다.



Contents

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합니다.



Solution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합니다.

(072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1401호 (트리플렉스)

전화 070-7608-0507 | 팩스 02-3144-3897 | 홈페이지 <http://www.archivesorks.net>

문화재/기록물 보존의 PORTAL

ARCHIVAL

quality materials
For Preservation and Storage



(주)삼흥과학

universityproducts
THE ARCHIVAL COMPANY
Providing Innovative Archival Solutions to
Museum Professionals for Over 45 Years!

문화재/기록물 보존 전문업체 삼흥과학이 다양한 제품과 편리한 구성으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WWW.SAMHEUNG.COM



검색어 입력



오늘 본 상품



장바구니

보존·복원

연구·실험

신제품

포커스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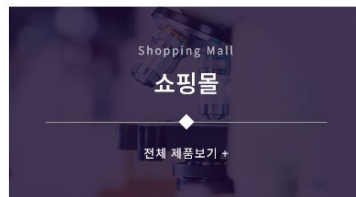
쇼핑몰

회사소개

사업분야

고객센터

이용안내



보존상자	6-33
중성폴더/바인더/봉투	34-69
제본	70-97
종이/필름/보드	98-125
소도구	126-161
환경관리	162-173
보존기기	174-191
자연사(표본 및 수집물)	192-213
직물	214-227
수집품(CD/동전/포스터)	228-255
사진	256-313
액자	314-339
전시 및 진열	340-377
캐비닛/랙	378-391
재난대비	392-405
색인	406-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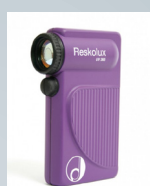
삼흥과학 신제품들



정밀분사가공기 made in SWISS



스팀보조페인트



자외선조사기



바인더인쇄도판기



(주) 삼흥과학

Best Supplier for Labs & Museums & Archives

Willard Conservation Equipment Engineers

universityproducts THE ARCHIVAL COMPANY

Print File ARCHIVAL STORAGE

AIR-BRASIVE Micro Abrasive Blasting Technology

LOGAN Tools for Art - Tools for Life

TALAS EST 1962

CF

DEPULVERA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36 (익선동, 운현신화타워)
전화 : 02-766-1732 팩스 : 02-766-1734 E-mail : info@samheung.com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기록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억의 가치는 기록으로, 기록의 가치는

(주)디앤디기술



Dream

단순한 물리적 네트워크에 존재 하는 정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꿈과 희망의 가치를 전달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Nifty

지난 13년 간의 신뢰와 경험 그리고 축적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멋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Delight

업무에 대한 최고의 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최선의 서비스, 기술에 대한
최강의 자부심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웃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Public Service

H/W, S/W

Consulting

System Integration

기록을 숨쉬게 하는 기술

1%의,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

100%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록관리 전문기업



www.rmsoft.co.kr

085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벽산디지털밸리6차 607호 (주)알엠소프트 TEL. 02-859-0884

NO.1 보안문서폐기 전문업체
(주)푸른솔환경

공공기관 최대규모 파쇄실적!!

시간당 10ton!! 최고 파쇄속도의 파쇄설비보유



Green company,
Purunsol
Environment

현장 이동 파쇄

고객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빠른 현장 파쇄 서비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파쇄 과정



예약 접수



파쇄차량 고객사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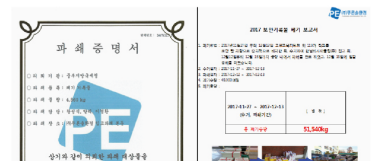
보안문서 운반



현장에서 바로 파쇄



파쇄결과 완료



파쇄 완료 후 고객사에 제출

공장 입고 파쇄

현장 작업이 어렵거나 대량의 문서를 단시간 내에 파쇄해야 할 경우 수거 후 자체 보안센터에서 파쇄합니다.



독립된 철통 보안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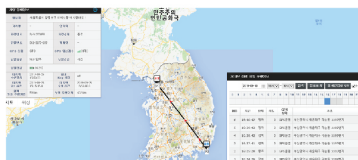
국내 최고 속도 2중 파쇄기 보유(3대)



입자 조절 가능, 조밀한 파쇄 입자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스마트폰 연동)



운행차량 실시간 GPS 확인(스마트폰 가능)



압축 및 용해

미세먼지, 공회전 문제해결 맞춤형 파쇄 서비스



TEL 070-5099-0000 | <http://purunsol.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03-22

퍼스트정보!

기록관리를 부탁해!

기록관리시스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체계구축 전문기업

기록관리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컨설팅, 기록관리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스템 개발, 사료관리시스템,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

기록관리시스템 개발/구축

정부부처 44개, 공공기관 다수
개발/구축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컨설팅/구축

국가기록원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주식회사 퍼스트정보

T: 02)881-5577, www.firstinfo.kr



어제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오늘의 기록은
내일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컨설팅

기록관리체계 수립
문서/기록관리 프로세스 진단
분류·파일링체계/관리기준 수립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업사료관리



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아카이브관리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브
사진관리시스템
보유목록관리시스템



수집·정리

기록물 수집 및 실물정리
DB구축/디지털화
전문 보존처리
보존용품 개발 및 공급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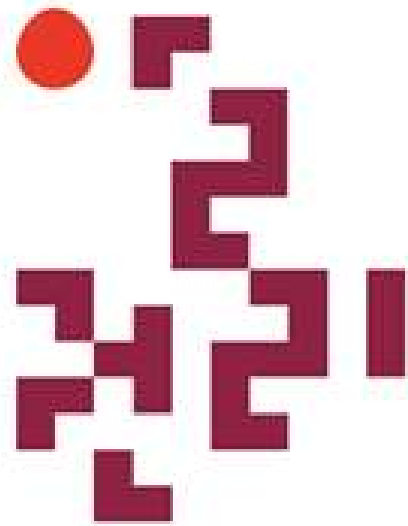
온·오프라인 전시
사사 편찬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기록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업

1999~

한국문화정보기술

www.kait.co.kr / T. 02-6309-6700



알권리연구소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학회 · 한국기록전문가협회